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522-01

정책보고서 2018-116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현수·이대영·추병주·이지향·이은호·고금지·천미경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22-01

정책보고서 2018-116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현수 · 이대영 · 추병주 · 이지향 · 이은호 · 고금지 · 천미경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확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018(공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이대영 전)사회보장정보원 책임연구원

추병주 한국평가원 연구위원

이지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이은호 법무법인 로펌광희재 대표

고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 출 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과 정책적 함의	13
제1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 · 15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19	
제3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 구성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25
제1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 구성 방향	27
제2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29
제4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 방향 · 45	
제1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47
제2절 복지사업 기준정보 통합조정	59
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표준화 방안	77
제5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활용을 위한 추천 시스템 고찰	83
제6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시스템 구축 방향	109
참고문헌	127

부록 131

〈부록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 실무자 대상 인식조사 실시방안 및 조사내용 구성안 131

〈부록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령 개정 검토 141

〈부록 3〉 연도별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09~2015) 186

표 목차

〈표 3-1〉 BPR/ISP의 사이버행정복지센터 대상사업 선별	30
〈표 3-2〉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2017)의 신청접수 가능사업 검토	31
〈표 3-3〉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의 신청접수 시범적용 사업	34
〈표 3-4〉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복지사업	36
〈표 3-5〉 수급희망 이력제의 법적근거(기초연금, 장애인연금)	39
〈표 3-6〉 지침 구성 비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40
〈표 4-1〉 사회보장급여 선정체계 표준화의 기대효과	51
〈표 4-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영역과 주요 내용	52
〈표 4-3〉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역할	52
〈표 4-4〉 연도별 기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53
〈표 4-5〉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실시 기준 정보 항목	61
〈표 4-6〉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 정보 항목	62
〈표 4-7〉 법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 정보 항목	65
〈표 4-8〉 핵심 기준정보 항목	70
〈표 4-9〉 기준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71
〈표 5-1〉 추천 시스템 장단점 요약	98
〈부표〉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내용	132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선정기준 및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가구 여건 및 상황 변화,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함

□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중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6가지 국정과제(42~47)를 제시하고 있음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지원 강화와 주거부담 완화와 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예방 중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함

□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재정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종류와 수급자도 증가 추세

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사회보장 예산) ('11) 86.4조원 → ('14) 106.4조원 → ('17) 129.5조원

○ (서비스 지급 기준 수급규모) ('11) 13백만명 → ('14) 17백만명 → ('17) 20백만명

□ 한편,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통합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공, 민간기관의 소득·재산 자료를 시의성 있게 연계하여 조사하는 ICT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이 구축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실정임

○ 이는 선별적 복지서비스,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제도별 복잡한 선정기준이 만들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신청주의 복지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전달체계 상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ICT 기반의 소득·재산 조사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란〉

☛ ICT 기반의 복지서비스 공적체계를 활용하여 제도적 기준에 의해 탈락하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서비스

○ 적극적 복지행정체계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제도적 사각지대 이외에 신청주의 패러다

임, 개인정보 활용 제약,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연계 정보를 기반으로 법령 개정, 제도적 개선과 병행하여 복지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또는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 및 연구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5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함

- (연구주제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행정 환경 및 운영실태 분석
- (연구주제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필수적인 고려사항 의견수렴
- (연구주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복지급여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행방안 마련
- (연구주제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및 프로세스 구축
- (연구주제 5)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의한 예상되는 변화 및 정책효과 분석

2. 연구내용

□ 연구 기본방향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선정기준 및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가구 여건 및 상황의 변화,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ICT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 혁신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국민의 체감도 및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찾아주는 복지행정 및 전달체계의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신청주의에 따른 국민 불편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기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관련 시스템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심으로 선행되고 있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통합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정책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주제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행정 환경 및 운영실태 분석

- 현행 복지서비스 법·제도 및 시스템 운영 현황, 복지서비스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실태 파악

○ (연구주제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필수적인 고려사항 조사 및 의견수렴

- 국민, 복지서비스 지원 희망자, 업무담당자(중앙/지방) 대상으로 웹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성과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

○ (연구주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복지급여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행방안 마련

- 현행 복지급여 신청 탈락, 탈 수급 등 이력이 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한 급여를 찾아주는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연구주제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및 프로세스 구축

- 개별 복지급여 신청·탈락 이력과 무관하게 국민의 수급희망 의사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 신청·제공하는 중장기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 (연구주제 5)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의한 변화 및 정책효과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따른 변화, 정책효과 및 체감도 등에 대한 예상 및 모의 분석

□ (연구주제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련 실태 파악 및 운영 여건 분석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행정적 운영 여건 및 실태 분석
-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 등에 따른 전달체계 상 사각지대와 제도적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현황에 대한 분석
- 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및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 분석·검토 및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 파악

□ (연구주제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수요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사항 및 필수 고려사항 조사 및 의견수렴

- 일반국민, 복지서비스 희망자, 현장 업무담당자(중앙/지방) 대상으로 웹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성과 지원체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

□ (연구주제 3) 복지급여 이력관리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단계 구축 및 운영방안

- 현행 복지급여의 신청 탈락, 탈 수급 또는 수급중지 등으로 공적 복지체계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유입되었던 이력이 있는 복지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한 급여를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 (법·제도) 현행 공적체계 내에서 주기적인 자격확인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마련
 -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확인조사에 대응되는 수요자 대상 지원의 관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이행방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적용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리 대상, 실시주기, 관리방식 등 운영방안,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사항 도출
- (기술적 방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 현행 범정부 사회보장 급여의 범위 내에서 인구학적 기준, 소득·재산 기준

및 기타 사회적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복지서비스 기준 관련 매트릭스 등
작성

□ (연구주제 4)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증장기 구축방안

- (개요) 개별 복지급여 신청·탈락 이력과 무관하게 국민의 한 번의 희망의사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생애주기에 맞추어 자동 신청·제공하는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법·제도) 복지급여 수급희망 의사에 따른 동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 (이행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리대상, 실시주기, 관리방식 등 운영방안, 일선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사항 도출
- (기술적 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고려사항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 (연구주제 5)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의한 변화 등 예상되는 정책효과

- 예상되는 변화 및 증장기 개편 시 비용·효과 분석, 국민과 행정기관 측면에서 예상되는 체감효과 분석

3.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 문헌 검토

- 복지행정 정보화에 따른 서비스 혁신 및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한 사례 제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수급이력관리제도 등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한 적용 가능한 복지행정 체계 선행 사례 및 정보화 기술동향 검토

□ 국내외 현장조사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및 방향, 현장 업무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이행방안 등 일선 현장 방문조사 및 FGI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행 관련 해외사례 현장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행정데이터 실증 분석

- 범정부 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및 자격기준 관련 행정데이터 분석
- 현행 복지서비스 신청탈락, 탈 수급 또는 수급중지,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 현황 데이터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및 예상 정책변화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활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관련 행정데이터 연계 및 분석을 통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활용방안 도출
 - 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방법론(서로 다른 복수의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와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 웹 기반 설문조사 방안 마련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 및 이행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웹 기반 설문조사 수행방안 마련
- 현장 복지급여 신청자 및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 업무처리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및 도입, 실행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자문회의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의견수렴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관련 전문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이행 관련 실무 담당자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 시군구·읍면동 통합조사 및 사업 담당 복지공무원 및 관계자 면담 또는 FGI 실시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법·제도·행정적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ICT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 분야 행정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 혁신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정책 체감도 및 효과성 제고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찾아주는 복지행정 및 정보 전달체계 혁신 선도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정책 체감도 향상에 기여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발전방향, 중장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에 핵심적 연구 자료로 활용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기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관련 시스템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심으로 선행되고 있는 수급이력관리제도 통합 연계 강화

제 2 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방향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의 필요성 및 의미

- 여기서는 복지정책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제도적 기준에 의해 탈락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 및 수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함
-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방안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360여개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재정규모가 월등히 크고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가장 선별적인 기초보장 생계급여부터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임

○ 그렇지만, 최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영역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빈곤해소를 위한 공공 부조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및 복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진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행복e음이 처음 구축된 2010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행복e음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100여 개에서 350여 개로 확대되고 복지대상자와 복지예산의 규모가 2010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을 정도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집행에 있어 큰 변화와 성과가 있었음

○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등 행복e음 운영 초기 강조되었던 정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 등의 성과를 넘어서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2009년 당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 중심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2년도 안 되는 단기간 동안 설계 및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거의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장되고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의 유형과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로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적 확대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사회안전망 개편 전략이 대부분 개별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포괄성과 보장성 제고를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러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신청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복지 수요자인 국민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임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구축방향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방향은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과 더불어 이를 보다 적극적 서비스로 연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 운영에 있어서 사각지대 문제 또는 새로운 소외나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현행 복지로 등 검색(searching) 및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Welfare Curation¹⁾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향후 2022년까지 구축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임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ICT 기반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신청 및 수혜이력 관리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
- 이것은 복지행정체계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단순

1) 여기서 Curation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는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개념보다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 자산 조사 관련 정보 및 복지혜택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및 신청이 가능한 체계로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하여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해야 함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정책적 함의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의미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최근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 기술들을 적용하여 2010년 구축되어 운영 중인 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2013년 각 부처별 복지사업 확장)을 재구조화 하여 스마트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추진
-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행복e음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적 관점의 제도 운영 및 관리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임
- 그 동안 행복e음을 통하여 지자체로 전달하는 사회보장제도가 100여개에서 360여개로 확대될 만큼 우리나라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및 집행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 온라인 신청 확대,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부정 수급 예방 및 조치 등의 성과도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2009년 당시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집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로서 단기간에 설계 및 구축됨에 따라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복지사업의 관리 범위가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의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만큼 이를 위한 전면적 확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급변하는 ICT 환경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하여 더 나은 정책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정책목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최근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현행 복지포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 및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시스템의 개념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 홈텍스 또는 최근 민간 서비스 시장 영역에서 다양하게 도입 확대되고 있는 찾아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구축방향을 설계할 수 있음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복지포의 검색(Searching) 및 정보 제공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 분야 수요자 중심 정보시스템(가칭 '마이웰(My Welfare / My Wellbeing 의미)')은,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정책 및 서비스 관련 대표적인 정보 인프라로서 복지 멤버십(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 등록제)을 도입하여 쌍방향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App 기반 또는 ARS 등 생애주기 및 정보 접근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및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 인프라 또는 정보 전달체계 구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3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증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임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복지 멤버십 사전 등록제 도입을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인터넷, ARS,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제공, 최근 강조되는 커뮤니티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자원의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플랫폼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및 지역별 예측모형 구축과 위치 기반의 시각화 및 공간정보의 제공을 통한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정책 집행 관련 기준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선택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현해야 함

〈참고〉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국민 인식조사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방향 인식(1~10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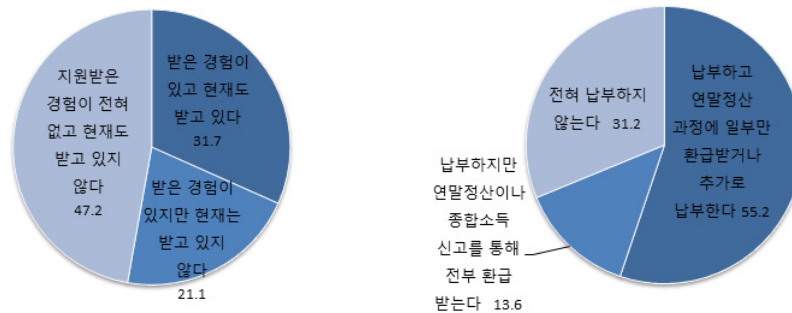
구 분	평균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다소 찬성	매우 찬성	합계
(1) 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6.19	17.6	24.3	23.3	34.9	100.0
(2) 중산층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	5.95	20.7	25.3	22.7	31.3	100.0
(3)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5.38	25.8	28.0	23.8	22.4	100.0
(4) 사회안전망 강화는 혁신에 기여	6.12	11.2	31.4	30.8	26.6	100.0
(5)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6.70	6.7	24.4	33.0	36.0	100.0

구 분	(1)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2)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	(3)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4)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는 혁신에 기여	(5)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전 체	6.19	5.95	5.38	6.12	6.70
남자	6.34	6.04	5.57	6.32	6.81
여자	6.04	5.86	5.19	5.93	6.59
20~29세	6.53	5.77	5.22	5.94	6.52
30~39세	6.36	6.33	5.43	6.09	6.88
40~49세	6.33	6.10	5.74	6.38	6.84
50~59세	6.17	5.97	5.58	6.23	6.84
60세 이상	5.79	5.68	5.01	5.99	6.49
고졸 이하	6.07	5.69	5.07	5.90	6.42
대학 이상	6.24	6.07	5.54	6.24	6.84
모름/무응답	6.91	5.66	3.11	4.55	5.98
99만원 이하	6.41	5.64	5.10	5.87	6.02
100-199만원	6.20	5.90	4.99	5.92	6.33
200-299만원	6.46	6.35	5.46	6.21	6.83
300-399만원	6.03	5.82	5.27	6.16	6.82
400-499만원	6.16	5.90	5.41	6.22	6.94
500만원 이상	6.22	6.00	5.61	6.22	6.78
모름/무응답	5.82	5.60	4.62	5.49	6.10

□ 복지급여 수혜경험 및 납세여부에 따른 사회안전망 개편방향 인식

○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현재 수혜여부 / 소득세 납부 및 환급에 따른 실질적 납세여부 집단

(단위: %)



○ 복지급여 수혜경험 및 납세여부에 따른 집단 유형 구분

(단위: %)

구 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합 계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14.5	13.1	27.6	55.2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4.2	2.9	6.5	13.6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13.0	5.1	13.1	31.2
합 계	31.7	21.1	47.2	100.0

○ 납세여부와 복지수혜 경험에 따라 집단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증세 필요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복지지위론(Welfare Status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복지 관련 지위를 “복지수혜자로서의 지위”, “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납세 및 복지수혜 여부에 따라 집단

을 구분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 수준에 따른 복지 지위별 구성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납세 및 복지수혜 경험에 따른 복지 및 증세 인식을 설명

- 특히, 집단별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 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복지국가 지지 성향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과 적극적 동의 관련 인식 등 다양한 복지 및 증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복지수혜 경험 및 복지지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남
- 납세 및 복지수급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복지 확대 및 증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와 복지 수급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진 집단의 경우,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최현수 외, 2015)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납세여부 및 복지급여 수혜경험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인식,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방향(① 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 보편적 복지의 확대, ③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 수요자 중심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함

-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방향으로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1~10점)

구 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81	6.87	6.68	6.76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7.29	6.99	6.62	6.91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61	6.70	6.35	6.51
전 체	6.79	6.85	6.58	6.70

제 3 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 구성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제1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 구성 방향

제2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3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 관련 법 구성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제1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 구성 방향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한계 및 대안적 법령 체계 구축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법 - 개별 복지사업별 법령 및 지침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령 구성 및 개정방향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중심으로 포용국가 이념을 반영하여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는 의무 사항을 천명
 - ☞ 최근 국민연금 개편방안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국가 지급보장 책임’ 명시와 관련된 동일한 조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상적 대안 vs. 구체적 대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개정안 검토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의 주요내용과 제2장(사회보장급여), 제3장(사회보장정보) 전반에 걸쳐 사회보장기본법 기본원칙에 근거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 특히 제2장 제3절(수급권자 등의 지원)을 별도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완하거나 신설할 수 있음
 - 개별 복지사업 법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기본원칙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법령을 준용하여 복지사업별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 집행되도록 하고, 현행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관련 조항을 토대로 표준 법령 및 지침(안)

을 도출하여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주요 복지급여 중심의 이력관리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운영

- 현행 복지급여의 신청 탈락, 탈 수급 또는 수급중지 등으로 공적 복지체계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유입되었던 이력이 있는 복지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안 마련
- 정기적(6개월) 또는 단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확인조사 주기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응하여 수요자 대상 지원의 관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주는 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확대 적용을 통해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적용대상 사업, 실시주기, 표준지침 등 운영방안 도출

□ 수급희망이력관리 확대 대상 복지사업 도출 및 표준 법령·지침 마련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도입과 함께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의 명칭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
- 단기적으로 수급희망이력관리 확대 대상 복지사업의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표준 법령 및 지침안 마련
- 현행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바탕으로 확대 적용대상 복지사업의 법령 및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 도출
- “기초연금법(제10조),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vs.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시행령(제9조의2), 시행규칙(제8조의2)” 구성을 비교하여 개별 복지사업 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 도출

제2절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방안

- 여기서는 수급희망 이력제를 확대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측면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 체계를 살펴보고, 수급희망 이력제 확대를 위하여 대상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2016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ISP의 온라인 신청접수 대상 사업과 2017년 사이버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접수 대상 사업에 대해서 검토
- 선행연구의 내용에 더하여 수급희망 이력제에 적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확대 대상 사업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모색함

1.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검토

가. BPR/ISP(2016)의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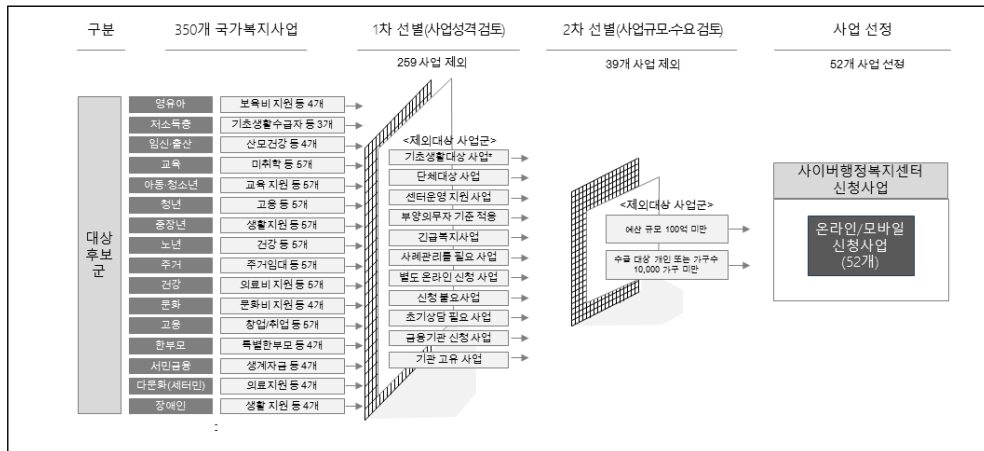
- 2016년 수행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ISP에서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신청 사업을 선정함
- 세부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차적으로 각각의 복지사업의 성격을 바탕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한 안내가 요구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인이 아닌 단체나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 부양의 무자 기준으로 인해 추가 구비서류가 있는 사업, 신청에 앞서 심층상담이 요구되는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필요 사업, 국가장학금과 같이 별도의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신청이 별도로 필요 없는 사업, 초기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업,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기관 고유 사업 등 온라인/모바일로 신청을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259

2) 2016년 수행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ISP 결과 보고서에서 온라인/모바일 기반 신청 사업을 도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임을 밝힘.

개 사업을 제외하였음

- 이후 91개 사업에 대해 예산규모 100억 미만 사업과 수급대상 개인 또는 가구가 10,000 미만인 사업을 추가로 제외하여 52개 사업을 온라인/모바일 신청 전환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음

[그림 3-1] BPR/ISP의 사이버행정복지센터 대상 사업 선별



- 52개 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에 한정하여 도출한 최종 24개 사업의 목록은 <표 3-1>과 같음

<표 3-1> BPR/ISP의 사이버행정복지센터 대상사업 선별

번호	분야	사업명	번호	분야	사업명
1	아동복지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13	아동복지서비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	노인복지서비스	기초연금	14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아보육료지원
3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5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의료비지원
4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6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5	노인복지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17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	아동복지서비스	다문화보육료지원	18	사회복지서비스	희망키움통장 (I, II)
7	아동복지서비스	만 0-5 세보육료지원사업	19	산모신생아복지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8	장애인복지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20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9	아동복지서비스	방과후보육료지원	21	차상위복지 서비스	차상위 장애인연금
10	아동복지서비스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22	차상위복지 서비스	차상위 장애수당
11	아동복지서비스	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사업	23	차상위복지 서비스	차상위 자활급여
12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획 지원	24	차상위복지 서비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나.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2017)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ISP 결과에서 제시한 52개 사업을 현행화하여 2개 사업(시간차등형보육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제외하고 현재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저귀지원과 임신출산진료비 사업을 더하여 5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였음
- BPR/ISP 결과 온라인/모바일 신청으로 우선 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제시된 22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온라인/모바일 신청 전환에 따른 실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은 제외3)
- 현재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의 BPR/ISP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학비 지원, 급식비,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기저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사업 등을 추가하여 1차적으로 33개를 도출하였음
- 세부 사업목록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음

<표 3-2>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2017)의 신청접수 가능사업 검토

번호	부처명	사업명	BPR/ISP (22)	온라인 신청 제공 (14)	사이버 행정복지 센터 신청접수 (33)	비고
1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	○	○	
2	교육부	고교 학비 지원		○	○	
3	교육부	급식비		○	○	
4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	○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는 미취업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과정에서 사업수행 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가 높다는 측면에서 제외하였음.

3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번호	부처명	사업명	BPR/ ISP (22)	온라인 신청 제공 (14)	사이버 행정복지 센터 신청접수 (33)	비고
6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7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	
8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10	국토교통부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1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2	보건복지부	다문화보육료지원	○		○	
13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		○	
15	교육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	
16	보건복지부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	○	○	
17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		○	
18	보건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	○		○	
19	교육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2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21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가스시설개선				
2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	
23	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	
24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	
2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	○	
26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2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	
28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29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	
30	보건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		○	
31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		○	
3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	○	○	
33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3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35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36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료 지원				
37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8	교육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	

번호	부처명	사업명	BPR/ ISP (22)	온라인 신청 제공 (14)	사이버 행정복지 센터 신청접수 (33)	비고
39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I, II)	○		○	
4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4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4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43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	
44	보건복지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			
45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46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지원(수업료면제)				
47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48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	○	○	
49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		○	
50	보건복지부	자활급여	○		○	
5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	
52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	

□ 도출한 33개 사업 가운데 시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8개 사업을 도출함

○ 33개 사업 가운데 사이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수행해야 하는 시범적용 사업으로는 현행 업무수행 체계에 대해 지장을 덜 주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예산 및 수요자 규모가 크고 생애주기 등으로 인해 신규 신청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에 수월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개 사업을 선정함

-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①)
- 둘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수당(②),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③),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④), 아이돌봄서비스(⑤)
- 셋째, 저소득층 고교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고교학비 지원(⑥)
- 넷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⑦)

-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⑧)을 선정
- 선정한 8개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음

<표 3-3>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의 신청접수 시범적용 사업

No	지원대상	부처명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1	산모 신생아	보건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 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별 예외지원* 허용
2	영유아	보건 복지부	가정 양육 수당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 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연령기준: 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3		보건 복지부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 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 제활동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 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 함) 부터 적용)
4		교육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 대하여 보 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지원연령(17.3.1.부터적용)
5		보건 복지부	아이 돌봄 서비스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아동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 한 경우 정부지원
6	고교생	교육부	고교 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학 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 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No	지원대상	부처명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7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8	노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 지원 대상

2.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복지사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ISP(2016)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연구(2017)에서 제시한 도출한 33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함
- 1차적으로 사업 현행화를 실시함. 폐지된 시간 차등형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 2018년 새롭게 도입된 아동수당을 포함
- 2차적으로 복지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의료)과 차상위 복지사업 가운데 누락되어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추가함
- 1·2차 검토를 거쳐 수급희망 이력제 대상 복지사업 38개를 도출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복지사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차상위까지 수급희망 이력제를 확대하는 경우 자격 기준으로 수급 가능한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희망 이력제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대상 복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음

36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표 3-4〉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복지사업

번호	부처명	사업명	소득재산 조사방법	BPR/ ISP (2016)	사이버 행정복지 센터 연구 (2017)	비고	차상위 복지사업 여부 (조사기준)
1	보건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미조사	○	○	온라인 신청可	
2	보건 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온라인 신청可	
3	보건 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건보료	○	○		
4	보건 복지부	다문화보육료지원	미조사	○	○		
5	보건 복지부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봄미사업	자격(기초/차상위/ 장애인활동지원)	○	○		
6	보건 복지부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미조사	○	○	온라인 신청可	
7	보건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건보료	○	○		
8	보건 복지부	방과후보육료지원	자격(차상위/ 장애아동)	○	○		
9	보건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보료	○	○	온라인 신청可	
10	보건 복지부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미조사	○	○		
11	보건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자격(기초)	○	○		
12	보건 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미조사		○	온라인 신청可	
13	보건 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미조사	○	○		
14	보건 복지부	장애아보육료지원	미조사	○	○		
15	보건 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자격(의료급여 2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16	보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건보료	○	○	온라인 신청可	
17	보건 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자격(기초/차상위)		○	온라인 신청可	
18	보건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보료	○	○		
19	보건 복지부	자활급여	자격(기초), 소득인정액 (차상위)	○	○		○

번호	부처명	사업명	소득재산 조사방법	BPR/ ISP (2016)	사이버 행정복지 센터 연구 (2017)	비고	차상위 복지사업 여부 (조사기준)
20	보건 복지부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	○		○
21	보건 복지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	○	온라인 신청可	
22	보건 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인정액	○	○		○
23	보건 복지부	희망키움통장(I, II)	자격(기초), 소득인정액 (차상위)	○	○		○
24	교육부	고교 학비 지원	소득인정액		○	온라인 신청可	
25	교육부	급식비	소득인정액		○	온라인 신청可	
26	교육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미조사		○	온라인 신청可	
27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득인정액		○		
28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	온라인 신청可	○
29	문화 체육관광 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자격(기초/차상위)		○		
30	산업 통상 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자격(기초)		○		
31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건보료		○	온라인 신청可	
32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	온라인 신청可	○
33	보건 복지부	기초생활(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추가	
34	보건 복지부	기초생활(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추가	
35	국토 교통부	기초생활(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추가	
36	교육부	기초생활(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추가	
37	보건 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인정액			추가	○
38	보건 복지부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추가	

3.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운영방안

가. 개요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도입과 함께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의 명칭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
 - 단기적으로 수급희망이력관리 확대 대상 복지사업의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표준 법령 및 지침안 마련
 - 현행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바탕으로 확대 적용대상 복지사업의 법령 및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 도출
 - “기초연금법(제10조),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 vs.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시행령(제9조의2), 시행규칙(제8조의2)” 구성을 비교하여 개별 복지사업 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 도출
-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법적근거가 법률(장애인연금)과 시행령(기초연금)으로 상이하나 지침은 거의 유사함
 -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탈락자(혹은 수급탈락자)를 대상으로 신청 이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명시하는 것이 법률 개정을 통해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3-5〉 수급희망 이력제의 법적근거(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구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 2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법률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시행령(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절차))에 더해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	법률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규정 신청서의 유효기간,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시행령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 시기	2016년 1월 시행	2017년 8월 시행

- 다만, 다양한 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지체, 그리고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측면에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차후 일괄적으로 법률 개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복지사업의 개별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사회보장 급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나. 표준지침 구성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침 구성 비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침 모두 ‘신청’에 수급희망 이력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침 내용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음

- 수급희망 이력관리 지침의 세부 구성은 거의 동일함

<표 3-6> 지침 구성 비교(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지침 - 신청	장애인연금 지침 - 신청
제2편 ○ 신청 / 15 I. 신청권자 1. 신청자격이 있는 자 2. 대리인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2. 신청기간 III. 신청 구비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IV. 신청서 작성·상당 1.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2. 신청 상당 V.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1.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2. 이력관리 신청 절차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VI. 접 수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I. 신청권자 1. 수급희망자 2. 대리인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II. 장애인연금의 신청 1. 신청방법 2. 신청 기간 3. 신청 접수 기관 4. 신청 시 구비서류 III.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1. 신청 상담 및 안내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IV.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V.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1. 홍보 시기 2. 홍보방법 및 내용 3. 홍보대상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표준지침(안) 구성

-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표준 지침을 구성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 법률 혹은 시행령 제○○조○)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개요

가. 목 적

- ○○○○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나. 대 상

- '00.00.00 이후 ○○○○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00.00.00 이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사전 등록을 신청한 자

다. 기 간

- ○○○○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 등록 후 서비스 중지* 때까지
- * ○○○○ 수급권 취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단, 5년 경과 후 연장 재신청 가능

라. 방 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 신청 안내 또는 자동 신청

2. 신청 절차

가. 신청방법

- ○○○○ 신청 시 동시 신청
 - ※ 조사대상 가구구성원 모두 이력관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 불가
 -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사전 등록 및 포괄적 동의 절차
(☞ 복지 멤버십 개념)

나. 이력관리 주체

-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사전 등록 신청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통합 관리

다. 제출서류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서(○○○○(법령) 별지 서식)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전 등록 및 포괄적 동의서(○○○○(법령) 별지 서식)
- 라.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 수급을 위해서는 ○○○○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 ※ ○○○○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하여야함.
 -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 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3. 조사 절차

가. 원 칙

-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행복e음」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를 유지(적용)

나. 소득 및 재산 등 적용기준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다. 조사 시기

- ○○○○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는 경우
-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라. 조사범위

- 수급자와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마. 조사방법

- 「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를 유지

바.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 대상 : ○○○○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
- 처리방법
 - ○○○○ 수급 가능자로 예측 결정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
-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 수급권 취득 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
- 안내방법
 -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음

사. 서비스 중지

- 대상 : ○○○○ 수급권 취득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 중지일자 : 중지 사유 발생일

4.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시 고려사항

-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온라인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병행 가능하도록 확대
 - 사전 등록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하도록 시범 적용 검토
 - 차상위 복지사업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 일원화/통합 연구가 진행 중이며, 통합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확대 적용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나 현장 방문조사 및 판정의 난이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점 판단 필요
 - 수급희망이력관리 적용 복지사업 확대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 등록 도입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 유형에 따른 표준 지침 마련
 - 지원 대상 구분 : 현행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vs. 사전 등록
 - 업무 프로세스 구분 : 통합조사팀 vs. 맞춤형 복지팀
 - 사업 유형 구분 : 기초·차상위 vs. 기초·차상위 이외 복지사업
 - 기타 사업의 경우, 복지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 사업의 도입 가능성, 표준 지침안 적용 및 부처 간 협의 가능성 추가 검토

제 4 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 방향

제1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제2절 복지사업 기준정보 통합조정

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표준화 방안

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표준화 방향

제1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여기서는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추진경과 및 방향에 대해 살펴봄⁴⁾

-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이후 우리나라는 복잡·다양한 선정기준 등 복지사업의 기준을 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화 및 단순화, 효율화 또는 합리화하는 복지사업의 기준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을 위해 병행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의의와, 필요성, 추진경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⁵⁾의 의의와 필요성

가. 복지사업의 기준과 기준표준화의 의미

- 복지사업의 기준은 그 의미하는 바를 고려할 때,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음
- 흔히, ‘복지사업 급여기준’, ‘복지사업 운영기준’등의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데, 용례를 통해 볼 때, ‘복지사업의 기준’은 복지급여의 생성·제공,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보다 실무적인 범주로서의 복지사업 기준은 “복지와 관련한 급여를 제공 받기 위한 자격 또는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각종 기준”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4) 본 장의 내용은 이대영 외(2015), 이대영 외(2017)에서 인용 및 정리하였음

5)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에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보다는 정책부처를 중심으로 한 실무적 검토와 정책적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한다는 의미는 각종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제도 운영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정책 활동임
 - 즉, ‘기준의 단순화 및 명확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며,
 - 기준의 단순화 및 명확화라는 기본전제하에서 제도의 목적성, 대상자의 유사성, 행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가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아님
- 복지사업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얹혀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복지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과 업무효율화 및 이를 위한 전산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의 관리와 급여집행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 자체 및 사업운영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이를 관리하는 것은 복지행정의 효율화와 투명성제고, 이용의 목적성 강화 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나.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필요성

- 복지사업 기준표준화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주요한 정책현안임
- 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관리(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 등)절차, 대상자 정보, 기타 업무 등 각종 기준을 공적 자료 중심으로 객관화, 단순화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임
- 따라서 각 기준들을 표준화하는 것은 복지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은, ① 급여 형평성 제고, ② 전달체계의 효율화, ③ 부적정 급여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과적인 분배, ④ 복지정보 관리운영시스템의 정합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⑤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조사·급여생성·제공·관리 업무 경감, ⑥ 복지사업의 신뢰성·정당성 제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0)

○ 급여 형평성 제고 측면

- 예를 들어, 급여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 기준을 사용 하는 사업 중 A 사업은 소득을 ‘근로소득’만으로 정의하는 반면, B 사업에서는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
- 이 경우, 동일대상이 A 사업에서는 급여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B 사업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수준 또는 생활수준이 동일한 대상 중 A 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급여대상이 되지만 B 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급여대상이 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 선정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급여 간 형평성 및 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전달체계의 효율화 측면

- 복지사업은 정책기획부터 대상자에게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고유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운영됨
- 그러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특히,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체계의 복잡성은 이러한 전달체계의 인력 및 조직 활용상의 비효율과 복잡성을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선정체계 표준화는 복지정책 집행 및 다양한 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부적정 급여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과적 분배 측면

- 복지사업은 목표 집단(급여대상)에게 욕구충족에 충분한 수준(목표급여수

준)의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별 실제 급여대상·수준과 목적상의 대상·수준의 부합 여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복지사업별 선정체계가 자의적·비합리적으로 설정될 경우, 실제 급여대상·수준과 목적 상 대상·수준이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 급여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 선정체계 표준화는 결과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정 급여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대상이나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높이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복지정보관리운영시스템의 정합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복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의 전제조건은 관리 정보 및 절차의 표준화이며, 사회보장급여 선정체계의 표준화는 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정합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토대로 복지정보관리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함

○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조사·급여생성·제공·관리 업무 경감 측면

-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 및 급여 관련 기준들이 상이하고 복잡할 경우, 조사·급여생성·제공·관리 업무를 사업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의 부담이 급증함
- 선정체계 표준화를 통해 사업별 급여기준을 통일하거나 기준의 상호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조사·급여생성·제공·관리 업무의 난이도를 줄이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복지사업의 신뢰성·정당성 제고 측면

- 급여의 형평성 제고, 부적정 급여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과적 분배 등을 통해 사업의 대국민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즉, 적정한 대상에게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한편,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적·인적 낭비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복지사

업이 우리사회 주요 문제해결에 정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와 지지를 국민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음

〈표 4-1〉 사회보장급여 선정체계 표준화의 기대효과

구 분		표준화의 목적	기대효과
제도 측면	정책결정 및 기획	급여의 형평성 제고와 복지재정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	→ 정책의 합리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	국가복지사업의 관련 정보의 정합성 제고로 효율적 복지사업의 관리 지원	→ 복지정보의 정합성·신뢰성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
	전달체계 운영	전달체계의 합리적 효율화로 국민의 복지제감도 향상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이해 당사자 측면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부처(제공자)	복지행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복지정책 집행의 효과성 향상	→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대상자)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용의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	→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방향성

- 복지사업의 기준 표준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표준화 부문(정책영역)과 업무절차 및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부문(시스템영역), 업무처리에 활용되는 정보의 표준화 부문(정보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정책영역의 표준화는 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에 대한 기본원칙 설정과 조정방향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시스템영역의 표준화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복지사업처리를 지원하는 각종 행정업무시스템들의 표준 설계원칙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정보영역의 표준화는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함

〈표 4-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영역과 주요 내용

구분		정책영역	시스템영역	정보영역
내 용		복지제도 기획(설계)·제공(운영) 상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 제공	시스템 상의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제도 관련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준 설정
주요 이슈		복지사업 운영기준 표준화(ex. 선정기준 표준화 등) 및 공통 업무 세부내용에 대한 표준화	관련시스템의 연계·통합, 통합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지원 수준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추진 과제	업무	복지사업기준 표준화 원칙 설정 및 제도적용	사업별 업무프로세스 분석, 통합프로세스·유형별 프로세스·개별프로세스 분류	데이터 형식 표준화, 정보연계 및 활용기준 설정
	정보화	표준화 이후, 표준화된 복지사업 기준정보의 제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유 업무에 대한 정보화 표준 제공	정보의 정합성 검증장치 마련

출처: 함영진 외. 2012c. p202에서 재구성.

3. 그 간의 표준화 추진 현황과 전망

가. 연도별 표준화 추진 현황과 성과(2009~2015)

- 복지사업 기준의 개선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4-3〉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역할

구분	내용
설치근거 및 구성	· 근거 : ‘보건복지급여 및 서비스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10년) · 구성 :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년 2회 운영)
주요 역할	· 보건복지사업의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표준 및 공통 업무 지침 등을 심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함

- 보건복지 사업 기준 심의위원회가 최초 구성된 '10년 이후부터 '15년까지 심의·의결된 안건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개임
- '10년 9개, '11년 3개, '12년 6개, '13년 8개, '14년 8개, '15년 6개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4〉 연도별 기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연도	안건명	절차	비고*
'10년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가방식	조사	
	2. 소득재산의 기준금액	조사	
	3. 소득 산정방식	조사	
	4. 처분 또는 매각된 재산의 처리방법	조사	
	5. 금융기관 외 대출금 인정범위	조사	
	6. 급여계좌 예외: 제3자 계좌	지급	
	7. 급여지급액 산정방식	지급	
	8. 신분변동 처리방법	신청	사후
	9. 임대보증금 처리방식	조사	
'11년	1. 연령 산정방식	신청	조사
	2. 보장가구	조사	
	3. 건강보험료 확인사업의 소득인정액 활용	조사	
'12년	1. 행복e음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	조사	
	2. 소득재산 등 변동자 급여적용시점	사후	
	3. 비등기 법인의 자동차 처리방안	조사	
	4. 근로장려금 처리방안	조사	
	5. 세종시 기본재산액 처리방안	조사	
	6. 세종시 토지가격적용율 처리방안	조사	
'13년	1. 부동산 재산 처분 시 평가기준	조사	
	2. 처분한 재산의 자연적 소비 금액	조사	
	3. 자동차 재산 처리시 지분율 산정 기준	조사	
	4. 수급자 전·출입시 행정 처리 절차 개선 방안	사후	
	5.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조사	결정
	6. 바우처사업 확인조사(변동관리) 주기	사후	
	7.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조사	
	8. 일용근로자의 범위	조사	

5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도	안전명	절차	비고*
'14년	1. 일반재산 중 회원권의 범위	조사	
	2. 건설기계 재산산정 기준	조사	
	3. 금융기관 외 대출금 범위 및 조사 방법	조사	
	4.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소득 반영	조사	
	5. 기본재산액 인정기준	조사	
	6. 환수(징수) 관련	사후	
	7.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세부 소득 산정 방안	조사	
	8. 자격 증명서 서식 통합	기타	
'15년	1. 상시근로소득 공적 자료 적용 기준	조사	
	2. 바우처 사업 등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조사	
	3. 이자·배당 소득 적용 표준	조사	
	4. 신청 서류 보존기간	신청	
	5. 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전환방안	결정	
	6. 차상위사업 대상자 조사 방안	조사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1개 이상의 절차에 걸쳐 해당되는 경우 표기

○ 지금까지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진 50개 안전을 통합업무 절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⁶⁾

- 조사가 29개(7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후관리(4개, 10.0%), 신청(3개, 7.5%), 지급(2개, 5.0%), 결정(1개, 2.5%), 기타(1개, 2.5%) 순으로 나타남
- 이를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준 개선이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자격 판정을 위해 수행되는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과거 사회복지통합업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위한 급여기준 표준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려해보면,⁷⁾ 현재까지도 여전히 조사 절차

6) 안전에 따라 여러 개 절차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1개 절차로 분류하였음

7) 당시 15개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침 조정 및 통합업무 작성을 위한 노력을 헤아리기 어려움. 보건복지부(2011)에 수록된 '급여기준 표준화' 에피소드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음. "표준화"라는 이 단어 하나가 100여개 사업의 각기 다른 조사업무를 조정·통합하는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작업인지 미처 몰랐었다.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내 사업부서 타부처와

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사업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급여기준을 일원화하거나, 단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토대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표준화가 그 주요 내용임

○ 연도별 주요 표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에는 소득유형별 표준화, 재산 종류별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 2010년에는 소득재산 기준소득, 소득 산정기준, 신분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등의 표준화 방안이 제시되었음
- 2011년에는 연령 산정방식 보장가구의 범위, 건보료 확인 사업의 소득인정액 활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본격적인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세종시 기본재산액 처리 방안, 토지가격 적용을 처리 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3년에는 부동산 재산 처분 시 평가기준, 처분한 재산의 자연적 소비 금액, 자동차 재산 처리시 지분율 산정 기준, 수급자 전·출입시 행정 처리 절차 개선 방안,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바우처사업 확인조사(변동관리) 주기,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 2014년에는 일반재산 중 회원권의 범위, 건설기계 재산산정 기준, 금융기관 외 대출금 범위 및 조사 방법,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소득 반영, 기본재산액 인정기준, 환수(징수) 관련,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세부 소득 산정 방안, 자격 증명서 서식 통합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5년에는 상시근로자 소득 조사 방법 기준, 바우처 사업 등 건보료 적용

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 사업의 정책목표, 수급자 특성, 수급률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방대함을 알았다 우리가 마련한 표준화 방안에 따라 각 사업에서의 수급율, 예산 등의 변동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수급권(수급자 유지, 탈락, 급여액 등) 변동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지침, 자료 등을 수 없이 검토하고, 회의하고, 의견을 들으며 공식 없는 수확문제를 풀 듯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갔다.”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를 위한 지역 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이 추진되었음

나. 중장기 사회보장 표준화 추진방안(2015)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사회보장 사업의 일반 기준·절차 마련 근거가 마련되었음

○ 7.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일반 절차*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필요

○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표준 및 절차의 필요성 제기

- 복지재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의 연계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절차적 기반 마련 등

• 동 법률은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와 서비스 연계,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규정 포함

□ 그간 표준화는 경제력 평가 관련 조사항목·방법 및 선정기준 중심으로 발전

○ 그동안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표준화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과 선정기준의 표준화를 중심으로 추진

- '09년부터 부동산 평가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일원화하거나, 나이를 산정할 때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하는 등 총 50개 과제 표준화

- ('09) 상시근로소득 적용순서 등 17개 과제, ('10) 소득재산 기준소득 등 8개 과제, ('11) 연령 산정방식 등 3개 과제, ('12) EITC 처리기준 등 6개 과제, ('13) 부동산 재산 처분 시 평가기준 등 8개 과제, ('14) 환수용어 통일 등 8개 과제

8) 중장기 사회보장 표준화 추진방안은 2015년 하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보건복지부 차관))에 상정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임. 본 내용은 2015년 8월 의결된 위원회 의결 자료 중 해당 내용을 발췌한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화, 지자체 업무체계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사회보장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표준화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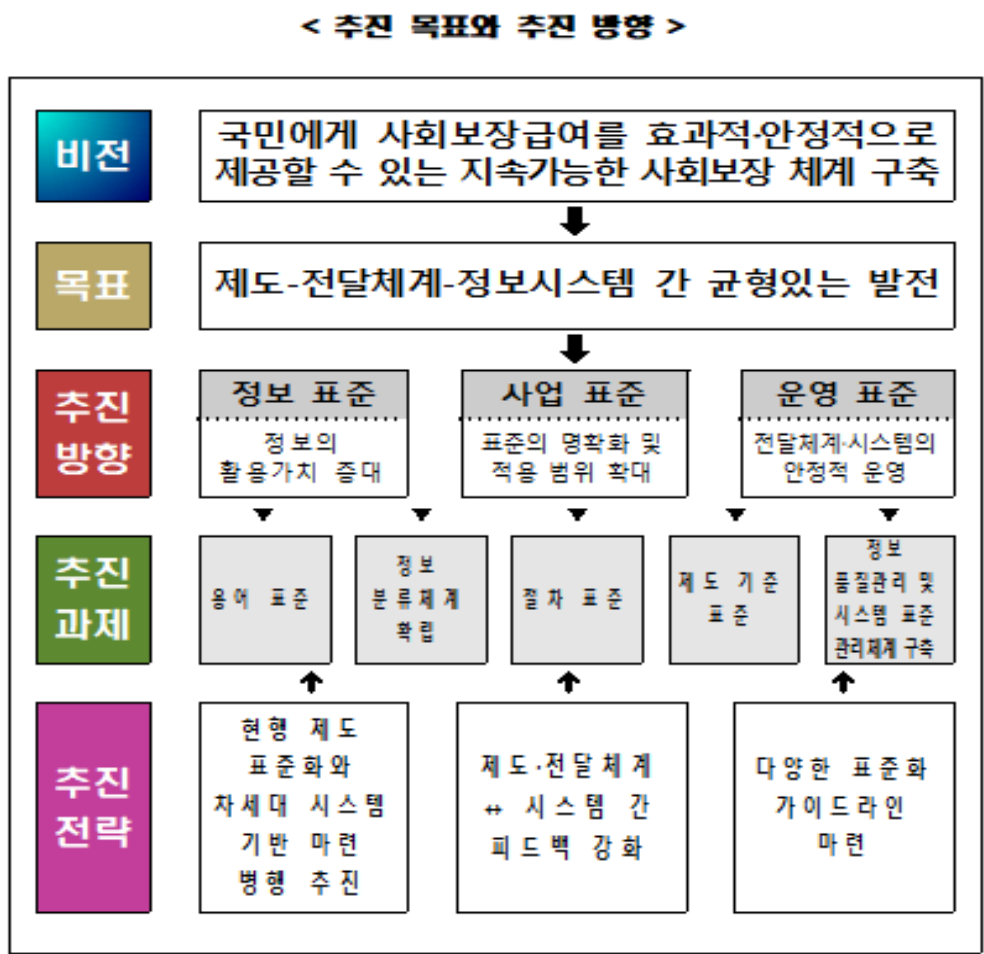
□ 전체 사회보장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 마련 필요

- 보건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전부처·지자체 사업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준사업안, 핵심 기준 명확화 필요
 -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 및 범정부 시스템의 이관·운영 등으로 범부처 사업의 표준화 관리, 지자체 사업의 표준화 관리 필요성 증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산발적으로 추가 구축·운영되어 온 행복e음, 범정부, 전자바우처, 등을 통합적인 관점 하에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필요
 - 복지 재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시스템 추가·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중복, 비효율, 불안정성의 문제들을 제도·시스템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
- 차세대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률을 도모할 필요

[그림 4-1] 중장기 사회보장 표준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자료: 보건복지부(2015)

제2절 복지사업 기준정보 통합조정

□ 여기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급여 기준정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통합조정 방안을 제시함⁹⁾

- 통합조정 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대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정보임
- 내용은 세 가지 유형의 기준정보 대상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 항목을 선정함. 이는 각각 관리대상 기준정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세부적으로 동일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범위 혹은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그 내용을 살펴봄

1.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

가. 관리주체 및 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는 통합자격정보부에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조건식을 설정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복지부 급여기준과와 복지정보운영과에서 조사를 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적용, 관리하고 있음

- 즉,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관리함

9) 추병주·이인수(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기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루어지고, 연도 전환시 대규모로 수행되며 연중이더라도 부서 요청에 의해 수시로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함. 중앙부처 350개 사회보장급여 기준정보를 관리하는 범정부 사회보장 급여 조사정보와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정보와는 달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는 사업별로 기준정보 항목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대분류의 1. 소득재산 반영 항목의 경우 행복e음에서는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형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특별지원 청소년, 소아암, 희귀난치성, 치매치료관리,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급여별로 정보가 수집/관리 되고 있음

□ 범정부 사업에서는 대학생학자금지원,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재가복지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지원, 보훈대상자 아파트 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영구임대주택공급 등의 사회보장급여별로 정보가 수집/관리 되고 있음

○ 즉,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관리함

나. 관리항목

□ 현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기준정보는 대분류(소득재산 반영, 자동차반영, 기본재산액, 기타공제 및 한도, 자연감소분 기준, 재산환산율,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지급 기준 등) 9개 항목, 중분류(소득, 재산, 공제, 감면률 정보, 적재량, 배기량, 기본재산, 주거용 재산한도, 타재산 증가분, 금융재산, 서비스명, 지급기준, 기준치 등) 31개 항목, 소분류(공제비율, 코드값1, 코드값2 등) 3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음

〈표 4-5〉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실시 기준 정보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득재산 반영	소득	-
	재산	-
	공제	-
	부채	-
2. 자동차 반영	감면율 정보	-
	조건	-
	차종	-
	적재량	-
	승차인원	-
	배기량	-
	차령	-
	차량가액	-
3. 기본재산액	기본재산	-
	특례·재산가액한도	-
	주거용재산한도	-
4. 기타공제 및 한도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부양의무자 월세 한도	-
5. 자연감소분 기준	자연감소분 공제	공제비율
6. 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7. 재산환산율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주거용재산	-
	고급재산	-
8.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
9. 급여지급 기준	서비스명	-
	지급기준	코드값1
		코드값2
	기준설명	-
	기준치	-

2.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정보

가. 관리주체 및 목적

-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 정보는 포털운영부에서 복지서비스 검색을 위한 조건식 설정에 활용 되고 있음. 연말에 지침, 법령, 내용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범정부에서 반영되는 자료도 기존의 조건식에 추가함
- 또한,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정보는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검색(간편, 상세)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되어진 정보이며, 복지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함¹⁰⁾

나. 관리항목

-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 정보는 대분류(개인, 가구, 소득재산 등) 3개 항목, 중분류(인적, 학적, 근로, 보훈대상여부, 건강보험, 건강, 기타, 특성, 가구원수, 주거, 소득, 재산, 산출액, 수급자격 등) 14개 항목, 소분류(연령, 학적, 근로유무, 유공자, 사망/사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재산금액, 건강보험료, 수급여부 등) 7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6〉 복지서비스 검색 기준 정보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개인	1 인적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장애여부
		장애등급
		세대주 여부
		국민여부

10) 기존에는 일반국민이 복지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16.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적용 되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들도 이용이 가능해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학적	학적
	3 근로	근로능력 유무
		근로자 여부
		취업준비생/창업예정자/구직자 여부
		정년퇴임 여부
		실직 여부
		어업종사자 여부
	4 보훈대상여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5. 건강보험	직장
		지역
	6. 건강	질병 유무
		장기요양 여부
	7. 기타	일제 강점기 피해자 여부
		자연재해 여부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 여부
		특수상황 피해자 여부
		화재피해 여부
		북한이탈주민 여부
		외국인 여부
		사망/사고
		폭력
		실종
		가출
		학교 밖 청소년 여부
		이혼(예정) 여부
		임산부 및 출산예정 여부
		산업재해 피해자 및 가족 여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여부
2. 가구	1. 특성	1인가구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다자녀가정 여부
		소년소녀가장 여부
		장애인가구 여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탁가정 여부
		한부모가구 여부
		조손가구 여부
		입양가구 여부
		노인부부가구 여부
		미혼모부가구 여부
		영유아가구 여부
		맞벌이가구 여부
		초중고 가구 여부
	2. 구성원수	가구원수
		자녀수
	3. 주거	주택보유 여부
		비주택 거주, 거주지 없음, 노숙 여부
		공공임대주택 여부
		농어촌거주 여부
		생활시설 거주 여부
3. 소득재산	1. 소득	월소득금액
		연소득금액
	2. 재산	재산금액
		금융재산금액
		자동차가액
	3. 산출액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4. 수급자격	생계급여 수급 여부
		의료급여 수급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교육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대상자 여부
		한부모 수급 여부

3.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정보

가. 관리 주체 및 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정부 사회보장 급여 조사정보는 범부처정보지원부에서 관리대상 사회보장급여 선정 등에 활용되고, 연초 1분기 전체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다만, 변경자료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울시 반영이 어려움

○ 또한,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정보는 매년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 정보로,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리대상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에 활용됨. 중앙부처 350개 사회보장급여의 정보가 운영 관리 되고 있음

나. 관리항목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 정보는 대분류(개요, 법령근거, 지침근거, 급여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예산, 전달체계, 정보시스템 등) 17개 항목, 중분류(사업명, 사업목적, 선정기준, 제공주기, 신청방법, 서식서류, 부양의무자 가구기준, 선정사유, 조사항목, 생애주기, 원하는 지원 등) 91개 항목, 소분류(범위, 상세내용, 유형, 서류명, 처리기준, 조사방법, 조사항목 값, 실시항목, 필요항목, 범위 등) 93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음

〈표 4-7〉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 정보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개요	사업명	
	소관부처	
	소관부서	
	사업기간	
	민원접수 대표번호	
	사업정책기관	
	사업목적	대분류 / 중분류 / 비고
	조사항목유형	
	지원대상설명	

66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선정기준상세	
2. 법령근거	법령근거유형#	
	법령근거#	
	근거상세#	
3. 지침근거	지침근거유형#	
	지침근거#	
	지침상세#	
4. 급여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형태 / 수준
	서비스내용	
	수급권자	범위 / 상세내용
	제공주기	
5. 복지서비스 예산	예산 구분	
	예산 금액	
6. 지원인원	개인	
	가구	
	대상자 연령	
	기관수	
	대상자 구분	상세내용
	지원단위	
7. 전달체계	신청접수기관	상세내용
	조사/심사기관	상세내용
	보장결정기관	상세내용
	급여서비스제공기관	상세내용
8. 문의처	문의처명	
	전화번호	
	사이트	
9. 신청	신청인	분류 / 상세내용
	신청방법	
	처리기한	
	필수구비서류	
	선택구비서류	
	서식서류#	유형 / 서류명 / 상세내용
10.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애플리케이션	
	자격관리여부	
	관리항목	
	관계기관 자료연계	실시항목 / 필요항목
	지급실적관리	
11. 가구원 기준	조사가구원 기준	상세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양의무자 가구원기준	상세내용
12.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3. 부양가족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4. 건강보험료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5. 타보장 수급자격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6. 기타요건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7. 사후관리 조사항목 및 방법	사업기간	.
	필요유형	상세내용
	지원기간	.
	필요항목	상세내용
	조사항목	조사항목 / 기준상세
18. 중복급여 서비스	중복서비스	상세내용
	금지근거	상세내용
	중복처리기준	유무 / 처리기준 / 근거
19. 맞춤형 검색 분류	생애주기	.
	대상특성	.
	가구유형	.
	소득구분	.
	지원유형	.
	목구유형	.
	원하는 지원	.

4. 기준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 사회보장급여 기준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기준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회보장급여가 지닌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 본 절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기준정보를 공동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필요한 기준정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핵심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및 활용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음

가. 핵심 기준정보

□ 사회보장급여 핵심 기준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대상자선정 및 급여지급과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가운데 변경이 이루어지는 정보로 선정함.

□ 기본정보 : 사회보장급여 기준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의미하며 핵심정보는 급여명, 급여코드, 자격명, 자격코드, 서비스명, 서비스코드

□ 대상자선정

○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의미하며, 핵심 기준정보는 조사대상 가구범위

○ 선정기준선 : 대상자 선정기준선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건보료, 자격, 기타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은 소득기준액, 재산기준액이, 건보료는 건보료 가입유형별(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로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자격은 수급급여가, 기타는 기준항목, 기준금액이 해당

○ 소득재산

- 소득·재산·부채·공제 항목 : 소득·재산·부채·공제 세부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이며, 핵심 기준정보는 자격명, 자격코드, 소득재산 상세분류명¹¹⁾, 소득재산 상세분류코드(200개), 소득재산 요율
- 재산환산율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이며, 핵심 기준정보는 자격명, 자격코드, 일반재산 환산율, 금융재산 환산율, 자동차 환산율, 주거용 재산 환산율, 고급재산 환산율
- 자동차 반영 : 자동차가 재산에 반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하여 관리가

11) 소득재산 상세분류에는 소득, 재산, 공제, 부채가 포함됨

요구되는 항목이며 핵심 기준정보는 자격명, 자격코드, 감면율, 자동차 조건1, 자동차 조건2, 차종, 적재량, 승차인원,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 추가 공제 : 소득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공제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이며 크게 소득공제, 재산공제, 기타공제로 구분됨.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재산공제는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공제액, 장기저축공제한도액,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본재산액, 특례재산가액한도액,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마지막으로 기타공제는 자연감소분 공제가 해당되며 공제기준과 공제비율

- 기타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구분, 주거급여 급지 구분, 지역별 토지가격적용율이 요구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이며, 핵심정보는 지역구분은 시도명, 시도코드,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지역구분명, 지역구분코드가, 주거급여 급지 구분은 시도명, 시도코드, 급지 가, 토지가격적용율은 읍면동명, 읍면동코드, 토지가격적용율

□ 급여지급

- 급여형태 및 수준 : 급여지급이 어떠한 형태 및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항목이며 핵심 기준정보는 급여대상, 급여유형, 지급기준명1, 지급기준코드1, 지급기준설명1, 지급기준명2, 지급기준코드2, 지급기준설명2, 지급수준¹²⁾
- 지급공제 : 지급금액에서 공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으로 장기입원공제가 해당되며, 핵심 기준정보는 가구규모, 공제금액

12) 가구규모에 따라 지급수준이 다른 경우 가구규모별 지급수준이 핵심정보에 해당함

〈표 4-8〉 핵심 기준정보 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준정보			
		구분			
기본	기본정보	공통	급여명	급여코드	자격명
			자격코드	서비스명	서비스코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선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		-
		소득재산	소득기준액	재산기준액	-
		건보료	가입유형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본인부담금
		자격	수급급여	-	-
		기타	기준항목	기준금액	-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	-
	소득재산부채공제	-	상세분류명	상세분류코드	소득재산 요율
	재산환산율	-	일반재산 환산율	금융재산 환산율	자동차 환산율
		-	주거용 재산 환산율	고급재산 환산율	-
	자동차 반영	-	감면율	자동차조건1	자동차조건2
		-	차종	적재량	승차인원
		-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추가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	-
		재산공제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공제액	장기저축 공제한도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특례재산가액 한도액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타공제 (자연감소분)	공제기준	공제비율	-
	기타	지역구분	시도명	시도코드	시군구명
			시군구 코드	지역구분명	
		주거급여 지급 구분	시도명	시도명코드	지급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율	읍면동명	읍면동코드	토지가격 적용율
급여 지급	급여형태 및 수준	-	급여대상	급여형태	지급수준*
		-	지급기준명1	지급기준코드1	지급기준설명1
		-	지급기준명2	지급기준코드2	지급기준설명2
	지급공제	장기입원 공제**	가구규모	공제금액	-

* 가구규모별 지급수준이 상이한 경우 가구규모별 지급수준

** 가구규모별 입원자 1인당 공제금액

나. 표준 프레임워크

- 통합 프레임워크는 사회보장급여 기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체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정보 틀을 원용하되, 앞서 제시한 핵심 기준정보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음
- 통합 프레임워크에서 참조정보가 아닌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본정보(개요)에 있어 급여명은 중앙부처 350개 사회보장급여 기준으로 작성하며, 급여·자격·서비스 이름과 코드를 포함
 - 둘째, 급여서비스 제공에 있어 급여의 대상/형태/수준/기준/공제를 포함
 - 셋째, 소득재산 항목 및 조사방법에 있어 핵심정보에 해당되는 소득재산공제 부채 항목의 상세분류명, 상세분류코드, 소득재산요율을 포함하며, 조사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였음¹³⁾
 - 마지막으로 기존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득인정액 연산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인 재산환산율, 자동차 반영, 추가공제(소득공제, 재산공제, 기타공제), 기타(지역구분, 주거급여 급지구분, 지역별 토지가격적용율)를 통합 프레임워크에 포함
 -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 프레임워크의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9>과 같음

<표 4-9> 기준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대분류	중(소)분류	세부 항목
1. 개요	급여명(급여코드)	※ 350개 사회보장급여 기준
	자격명(자격코드)	
	서비스명(서비스코드)	
	소관부처	
	소관부서	

13) 일례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인 경우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을, 건보료 조사인 경우 가입유형,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것을 들 수 있음.

7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분류	중(소)분류	세부 항목
	사업기간	
	민원접수 대표번호	
	사업정책기관	
	사업목적	대분류 / 중분류 / 비고
	조사항목유형	
	지원대상설명	
	선정기준상세	
2. 법령근거	법령근거유형#	
	법령근거#	
	근거상세#	
3. 지침근거	지침근거유형#	
	지침근거#	
	지침상세#	
4. 급여제공	급여대상	급여대상 범위
	급여형태	
	급여수준	
	지급기준	기준명 / 기준코드 / 기준설명
	지급공제(장기입원)	가구규모 / 공제금액
	제공주기	
5. 예산	예산 구분	
	예산 금액	
6. 지원규모	개인	
	가구	
	대상자 연령	
	기관수	
	대상자 구분	상세내용
	지원단위	
7. 전달체계	신청접수기관	상세내용
	조사/심사기관	상세내용
	보장결정기관	상세내용
	급여서비스제공기관	상세내용
8. 담당부서	문의처명	
	전화번호	
	사이트	
9. 신청	신청인	분류 / 상세내용
	신청방법	
	처리기한	
	필수구비서류	
	선택구비서류	
	서식서류#	유형 / 서류명 / 상세내용
10.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애플리케이션	

대분류	중(소)분류	세부 항목
	자격관리여부	
	관리항목	
	관계기관 자료연계	실시항목 / 필요항목
	지급실적관리	
11.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12.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상세분류명 / 상세분류코드 / 소득재산 요율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 / 소득기준액 / 재산기준액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13. 부양가족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상세분류명 / 상세분류코드 / 소득재산 요율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 / 소득기준액 / 재산기준액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4. 건강보험료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가입유형 /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별 본인부담금 /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5. 타보장 수급자격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해당 수급자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해당 수급자격 여부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6. 기타요건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기준항목 상세내용 / 조사항목값 / 조사방법
	선정사유#	인적특성(성/연령/장애/가구유형/기타) / 기준금액 선정사유 / 선정기준 / 기준상세
17. 사후관리 조사항목 및 방법	사업기간	
	필요유형	상세내용
	지원기간	
	필요항목	상세내용
	조사항목	조사항목 / 기준상세
18. 중복급여 서비스	중복서비스	상세내용
	금지근거	상세내용
	중복처리기준	유무 / 처리기준 / 근거

7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분류	중(소)분류		세부 항목
19. 맞춤형 검색 분류	생애주기		
	대상특성		
	가구유형		
	소득구분		
	지원유형		
	욕구유형		
	원하는지원		
20. 소득인정액 연산	재산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 금융재산 환산율 / 자동차 환산율 / 주거용 재산 환산율 / 고급재산 환산율
	자동차 반영		감면율 / 자동차조건1 / 자동차조건2 / 차종 / 적재량 / 승차인원 / 배기량 / 차령 / 차량가액
	추가 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액
		재산공제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공제액 / 장기저축 공제한도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별 특례재산가액 한도액 /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타공제(자연감소분)	공제기준 / 공제비율
	기타	지역구분	시도명 / 시도코드 / 시군구명 / 시군구코드 / 지역구분명
		주거급여 지급 구분	시도명 / 시도명코드 / 지급
		지역별 토지가격적용 율	읍면동명 / 읍면동코드 / 토지가격적용율

다.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리방안

□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상호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러한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있어서 표준체계 마련이 요구됨

○ 기준정보 표준체계는 기준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주체 간 합의된 체계라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는 해당 급여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임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표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과 협의가 요구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차원에서 앞서 살펴본 기준정보 통합 프레임

워크를 바탕으로 기준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면 [그림 4-2]와 같음.

- 이러한 틀을 기초로 하여 기준정보의 수집 - 분석 -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림 4-2] 기준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안)

01. 개요	02. 법령근거	03. 지침근거	04. 급여제공	05. 예산
06. 지원규모	07. 전달체계	08. 담당부서	09. 신청	10. 정보시스템
11. 조사대상	12. 소득재산	13. 소득재산	14. 건보료	15. 자격기준
16. 기타요건	17. 사후관리	18. 중복급여	19. 맞춤검색	20. 소득인정액

- 기준정보의 관리절차는 크게 ① 기준정보 수집, ② 수집정보 분석, ③ 수집정보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준정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준정보 수집에 있어 기준정보 활용주체별로 요구되는 기준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현행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준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주체를 구성하고, 기준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정보 수집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준정보의 분석과 활용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정보 분석 및 활용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 기준정보 분석 및 활용 단계는 기본적으로 기준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선이라는 큰 방향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각각의 기준정보 활용주체들이 개별적인 프레임워크에 기준정보를 분석·활용하기보다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기준정보 활용주체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준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을 조망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협의·조정, 나아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설·변경(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소득재산 표준화 방안

□ 표준화는 자산조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재산 항목·방법 및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 및 분화로 인해 표준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사업 통합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개별화된 선정기준, 평가기준, 관리(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 등)절차, 대상정보, 기타 업무 등 각종 기준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객관화, 단순화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적,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것임

○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과 목표는, ①급여 형평성 제고, ②전달체계 효율화, ③부적정 급여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효과적 분배, ④복지정보관리운영시스템의 정합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⑤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산조사·급여생성·제공·관리업무 경감, ⑥복지사업의 신뢰성·정당성 제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구 분		표준화의 목표	기대효과
제도 측면	정책결정 및 기획	급여의 형평성 제고와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한 체감도 향상	→ 정책의 합리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	국가복지사업의 관련 정보의 정합성 제고로 효율적 복지사업의 관리 지원	→ 복지정보의 정합성·신뢰성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
	전달체계 운영	전달체계의 합리적 효율화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 도모	→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이해 당사자 측면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부처 (서비스 제공자)	복지행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복지정책 집행의 효과성 향상	→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수요자)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용의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	→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증가

□ 표준 소득

- (기본원칙) 표준 소득에서는 공적자료 중심으로 파악되는 소득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통계청이 생산하는 소득통계의 총소득 개념과 유사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산출 소득 개념과 동일하게 산출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기관 조사항목으로 통일하여 적용
 - 국세청 종합소득 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활용 여부 확인 필요
- 주택연금, 농지연금 100% 반영
 - 현재 50%만 반영하고 있으나, 제도 적용 시 공제에서 적용 여부 고려
- 국외근로소득, 국외사업소득, 국외재산소득, 국외기타소득의 경우, 공적 행정 자료에 의해 파악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포함 검토
- 사적이전소득(외국인 배우자 소득 조정 검토 필요) 제외
- 무료임차료(사용대차,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무료임차 재검토)
-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공적이전소득 중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항목 삭제

□ 표준 재산

- (기본원칙) 모든 재산 항목 합산(총 재산) 후 공통 부채 반영(순 재산)
 - 사업간 차이가 있는 동산(4개) 및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1개) 포함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1개 항목)은 통합
- 전월세보증금(0.95)는 필요 시 공제 개념으로 공통 적용하거나 공시가격 비율 상향 조정 고려하여 미적용 (선박 항공기 3.5 재검토)
- 자동차의 경우, 고액 재산의 별도 구분 없이 재산가액 중심으로 합산

□ 표준 부채 : 개인 간 사채 제외, 금융조회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채 적용(법원 인정 사채 포함여부 검토 필요)

□ 표준 공제 : 소득과 재산의 표준 공제항목 적용 여부 검토

- 소득세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 개념으로 공통 적용 가능한 항목 도출
- 세부적인 소득공제나 재산공제는 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소득세 체계의 특별공제 개념과 같이 필요 시 적용
- 근로소득공제 ☞ (1안)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vs. (2안) 미적용
- 기본재산공제 ☞ (1안) 기본재산공제 공통 적용 vs. (2안) 미적용
 - (3안) 지역 차등 & 사업 유형별 통합, (4안) 지역 통합 & 사업 유형별 차등, (5안) 지역 차등 & 사업 유형별 차등 검토 ☞ 표준 소득인정액 산정 후 적용
 - 지역별 생활수준(전월세보증금 기준으로 최저주거비용 또는 적정비용)의 차이 반영 vs. 보유재산 항목 및 지역구분 없이 일정 수준 자산축적 인정
- 세부 소득 및 재산 공제는 기초·차상위 & 나머지 사업 통합 표준화

□ 표준 환산율 : 재산 유형에 상관없이 월 1%

- (기본원칙) 기초생활보장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 수준 연계하고 환산율 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은 기초연금 유형을 중심으로 조정, 재산 환산율 근거 제시 및 국민 이해도 제고
- <비교 대안> 월 0.5% (최근 월세 전환율) / 기초연금 환산율(연 4%)

□ 표준 소득인정액

- (기본원칙) 표준 소득 및 표준 재산을 기반으로 표준 공제항목과 표준 환산율을 반영하여 비교 가능하며,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
- 상대적 분위 구분 및 적용 시 표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적용
- 기초 및 차상위 이외의 나머지 사업에서 가급적 표준 소득인정액 적용
- Cut-off 방식 적용의 경우 또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 중심 비율 적용 시 표준 소득과 표준 재산(총 자산 or 순 자산)으로 분리하여 적용

□ 3가지 복지사업 유형별 표준화 적용 방안

○ (기본원칙) 표준 소득인정액 구성요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소득인정액 기반으로 사업 유형별 소득, 재산, 부채, 공제 영역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적용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나머지 복지사업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되, 사업 유형 간 공통 요소를 최대한 적용하여 단일 또는 2가지 유형으로 축소 적용하며, 유형 내 사업에서는 표준화 방안 원칙적으로 공통 적용

- 소득 ⇄ 기초생활보장 vs. 차상위 & 나머지(표준 소득)
- 재산 ⇄ 표준 재산 및 표준 부채 표준화 방안 공통 적용
- 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vs. 나머지
- 재산공제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vs. 나머지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vs. 나머지(표준 환산율)

○ 기초생활보장

- 소득 : 표준 소득 + 사적이전소득 및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 : 표준 재산 적용
- 부채 : 표준 부채 + 개인 간 사채(법원 인정 사채 추가 반영)
- 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공제, 농어민특별공제 등 항목 조정 영향이 가장 큰 현행 기초생활보장 공제 항목 검토 후 표준화 방안 마련하여 적용
- 재산공제 :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항목 조정의 영향이 가장 큰 현행 기초생활보장 공제 항목 검토 후 표준화하여 적용

○ 차상위 지원(통합조정안 반영) ⇄ 소득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역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통합 조정안 마련

- 소득 : 표준 소득 적용 ⇄ 기초생활보장과 사적이전소득 및 보장기관 확인 소득 항목에서만 차이

○ 나머지 사업 ⇄ 표준 소득인정액을 원칙으로, 공제 영역만 추가 표준화

〈참고〉 복지사업 조사대상 소득·재산·부채·공제항목 세부 내역

□ 표준화 대상 주요 복지사업 구분

○ 사업유형 구분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나머지(기초·장애인연금 외)

* 차상위 복지사업(7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참고] 차상위 복지사업 통합조정(안) - 복지정책과 연구 진행

- 차상위 복지사업(7개)의 소득재산 조사 기준 통합조정(안) 모색
- 차상위 지원 사업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을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조정(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처리 기준 등)
- ※ 단, 소득재산 조사 항목은 다르게 구성(차상위 사업은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소득/재산/부채/공제 항목 개요

○ 전체 소득재산 항목* : 209개

- 소득재산 항목 구성 : 소득(84), 재산(48), 공제(66), 부채(11)

○ 복지사업 활용 소득재산 항목* : 181개

- 소득재산 항목 구성 : 소득(78), 재산(46), 공제(49), 부채(8)

○ 주요 복지사업의 조사대상 소득재산 항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170), 주거·교육(169) (주거, 교육은 부양비 제외)
- 차상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161), 차상위자활(163), 차상위장애인(156),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147), 차상위자산형성지원(164), 한부모가족지원(165)
- 기초연금·장애인연금(76)

제 5 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활용을 위한 추천 시스템 고찰

5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 활용을 위한 추천 시스템 고찰

1. 추천 시스템 개요

- 인터넷의 등장 및 네트워크의 보급은 정보의 홍수 상태를 초래함.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모든 정보들의 가치 및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의 가치 유무를 파악하는 활동이 불가능함
 -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에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필요를 느끼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한 정보들로부터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Information filtering¹⁴⁾)이 각광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정보 검색 기술(Information Retrieval) 과 추천 기술(Recommendation)을 들 수 있음 (Park et al., 2017)
 - 검색 기술은 사용자가 검색어(Query)를 지정하여 모든 정보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써, 사용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반응형 시스템(Reactive system)으로 볼 수 있음
 - 추천 기술은 보다 능동적인 방식임. 사용자의 명시적인 검색어 지정 없어도, 사용자의 평상 시 사용 패턴¹⁵⁾을 근간으로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임
- 추천 시스템은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템(예: 제품, 서비스, 콘텐츠) 중

14) '필터링(filtering)'이란 전체 항목 중 적당한 항목을 선택하는 기술을 일컫는 IT 용어임

15) 예를 들어 정보 검색어 사용 패턴, 서비스 사용 패턴, 검색된 자료들의 패턴, 물품 구매 패턴 등 인터넷 사용 이력으로부터 추출이 가능한 행동 패턴이라 지칭할 수 있음.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만한 아이템을 추측하고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함 (Lu et al., 2015, 서봉원, 2016)

○ 인공지능을 포함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 이력, 사용자 간 관계, 상품 유사도 및 사용자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추정하여, 개인의 니즈에 맞춘 제품/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함

○ 적절한 시점에 요구되는 콘텐츠를 바로 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A system delivering the Right contents to the Right user at the Right moment, 3R)로도 정의할 수 있음 (Seungtaek Park et al., 2017)

○ 예를 들어, 온라인 거래에서 추천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사용자의 검색 이력, 클릭 제품들, 클릭한 제품에 머무르는 시간, 구매 상품, 리뷰 및 평점 등 사용자 이력을 수집한 후 이를 통해 사용자가 향후 구매할만한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

□ 대체로 제품/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 고객 개개인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하고 있음(이효정 등, 2018, 오진오 등, 2014)

○ 1990년대 후반 뉴스 및 웹페이지 대상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정보 필터링 기법으로부터 추천 시스템 연구 개발 기원을 찾을 수 있음¹⁶⁾

○ 2006년 Netflix사에서 주최한 경연 대회(현재 사용중인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10% 이상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경우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함)을 기점으로 추천 시스템이 정교화, 고도화되기 시작함

○ 이후, 추천 시스템은 Netflix, Amazon, Facebook, Youtube 등 개인화된 기기를 통해서 개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음

16) 예를 들어 뉴스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열람한 기사목록 기록, 기사 클릭 기록, 기사 열람 시간 기록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웹페이지 내 기사들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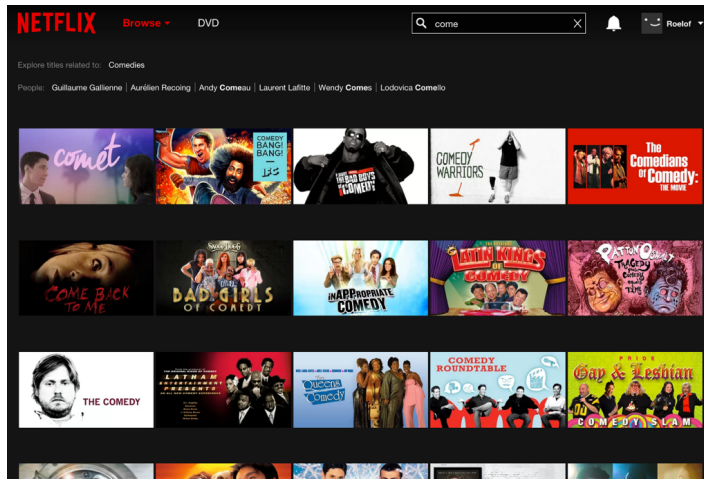
2. 추천 시스템 사례

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추천 시스템 도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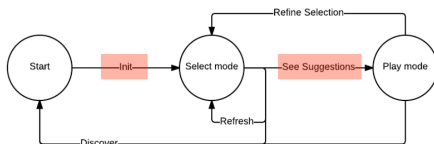
□ Netflix: 모델 기반 협력 필터링 도입을 통한 추천 시스템 고도화

- Netflix는 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영화 시청의 75%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짐. 영화 추천이 사용자 선호와 일치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알고리즘 개선 대회를 주최하고 있음
- 알고리즘 경쟁의 결과로 모델 기반 협력 필터링을 개발. 이는 단순히 고객들이 시청한 영화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데이터 안에 내재된 속성을 알아내어 추천에 사용하는 기법임
 - 내재된 속성을 찾아내기 위해 잠재 모델(Latent model), 베이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등을 사용
 - 고전적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매출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를 관람한 사용자에게 위 방법을 적용하면, 당 사용자가 시청한 이유가 주연 배우의 팬이어서인지, 영화 내 삽입된 음악 때문인지, 영화 평점에 기반하여 선택했는지 혹은 예매율에 의해서 선택했는지 잠재 노드(Latent node)를 활용하여 알아낼 수가 있음
- 2016년 Netflix Personalised Research Report에 따르면 Netflix 개인화 추천 엔진의 가치는 십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매출의 1/7 수준을 차지함. 당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0.1% 이상 고객을 서비스에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연 기준 5백에서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이끌어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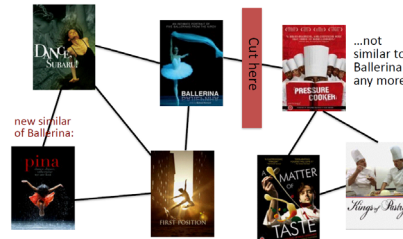
[그림 5-1] Netflix의 추천 시스템 적용 사례: 고객 사용 이력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해 내재된 잠재 속성을 활용하여 영화 추천을 시도함. 사용자의 초기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추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사용자를 최대한 많은 시간동안 서비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매출 신장에 기여함



최신 추천 시스템이 적용된 Netflix 서비스



사용자 인터랙션을 고려한 추천 시스템 구조



사용자 인터랙션 및 잠재 노드 활용을 통한 최적 추천 도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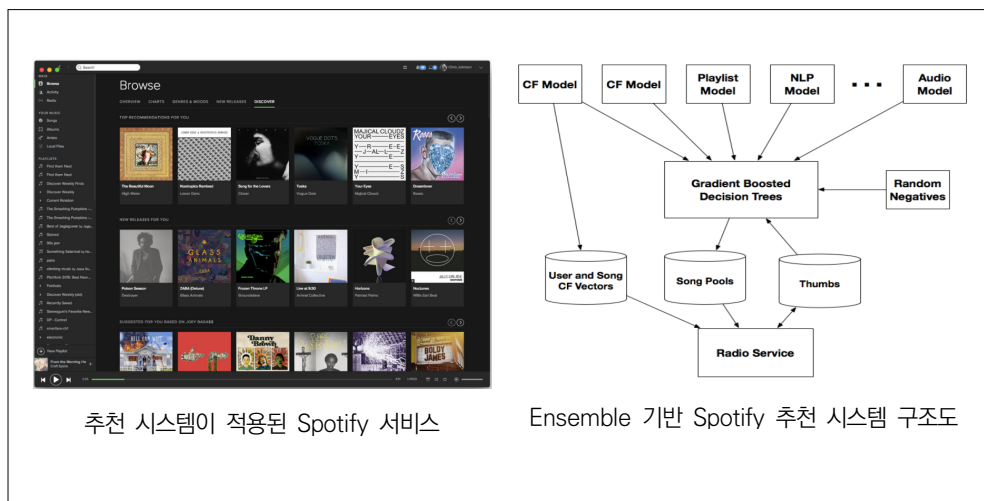
자료: Steck et al., 2015

□ Spotify: 딥러닝 기반 음원 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례

- Spotify는 7천 5백만 사용자들에게 3천만곡 이상의 음원 중에서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추천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하루 1테라 바이트 이상 쌓이는 사용자 로그를 분석하여 최적의 시점에 최적의 음원을 추천하고 있음

- ‘최고의 음악 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력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등, Ensemble 모델 접근을 통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딥러닝 알고리즘을 추론 엔진으로 사용, 블로그와 같은 공개 정보의 자연어를 처리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보들과 아티스트, 앨범, 노래 등의 정보 사이의 관계성을 근사화하여 보다 정확한 추천을 추구

[그림 5-2] Spotify의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 적용 사례: 다양한 고전적 협력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과 딥러닝 기반 시스템의 조화 방법 (Ensemble)을 통해 최적의 추천 음악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고전적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원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블로그, SNS를 분석하여 추천에 고려하는 것이 큰 특징



자료: Steck et a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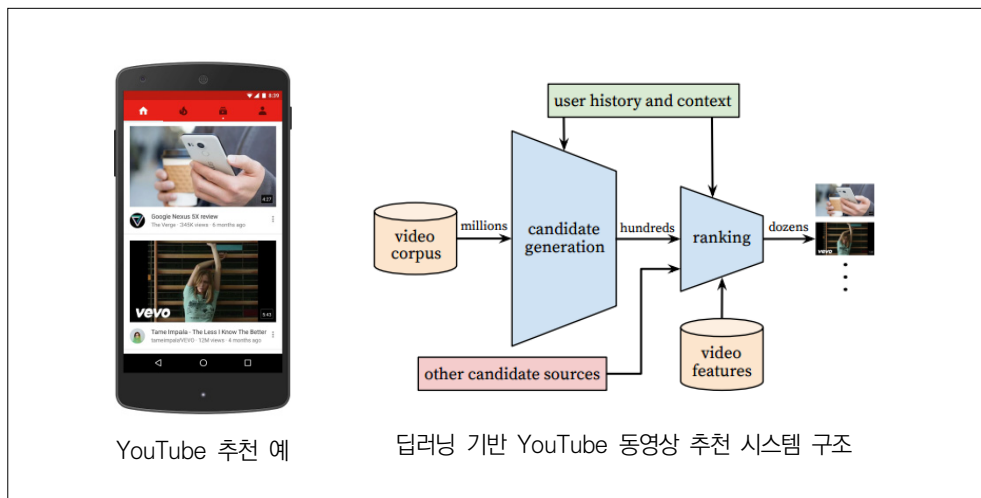
□ YouTube: 딥러닝을 이용한 음원 추천 서비스 고도화

- 2017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개인화를 위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2012년 이후 10배 이상의 시청률 증가를 달성함. 이는 동영상 시청 연장 및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 광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일으킴

○ 효과적인 동영상 추천을 위해,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 딥러닝 시스템을 이용 (Covington *et al.*, 2016)

- 수백만개의 동영상으로부터 몇백개의 후보군을 선정하는 딥러닝 시스템 및 후보군 동영상에 대한 랭킹을 추정하여 이를 적절히 배치하도록 돕는 딥러닝 시스템을 조화롭게 연결
- 고전적 방법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컴퓨팅 부하를 딥러닝 근사화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다양한 형태, 종류의 데이터 (예: 비디오 시청 데이터, 사용자 검색어, 지역, 영상이 제공된 시간, 성별, 및 영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추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랭킹의 경우 동영상의 기대 시청 시간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 실제로 시청하지는 않지만 클릭만으로 동영상을 탐험하는 사용자 패턴을 미리 감지하여, 극복하는 효과를 가져옴

[그림 5-3] YouTube의 딥러닝 기반 동영상 추천 시스템 적용 사례: 수백만 동영상으로부터 몇백개 후보군을 선정하고, 여기서 비디오 시청 예측 시간을 바탕으로 최종 랭킹을 적용 후 추천하는 두 단계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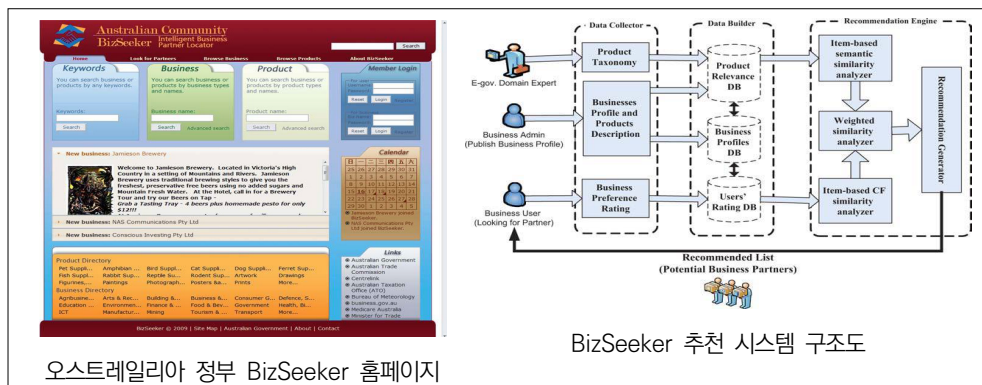


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內 추천 시스템 도입 사례

□ BizSeeker: 추천 시스템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Lu et al., 2010)

- 미국¹⁷⁾, 오스트레일리아¹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거래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법을 준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선택하는 것은 자국 통상과 무역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이는 향후 기업들, 특히 비즈니스 시작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 업체들의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신중한 노력을 들여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침
- BizSeeker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더불어 신뢰(trust)를 고려한 협력 필터링 기술을 근간으로 간단한 기업 프로필과 검색어를 참조하여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공
 - 중소기업이 파트너 선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이고, 향후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 공헌

[그림 5-4] BizSeeker 추천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사례: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별 전문가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등록한 회사/제품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 기업이 검색했을 때 가장 적합하고 신뢰도가 높은 기업을 추천하여 향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17) The US Commercial Service (<http://www.export.gov>)

18) The Australian Trade Commission Government Agency (<http://www.austrade.gov.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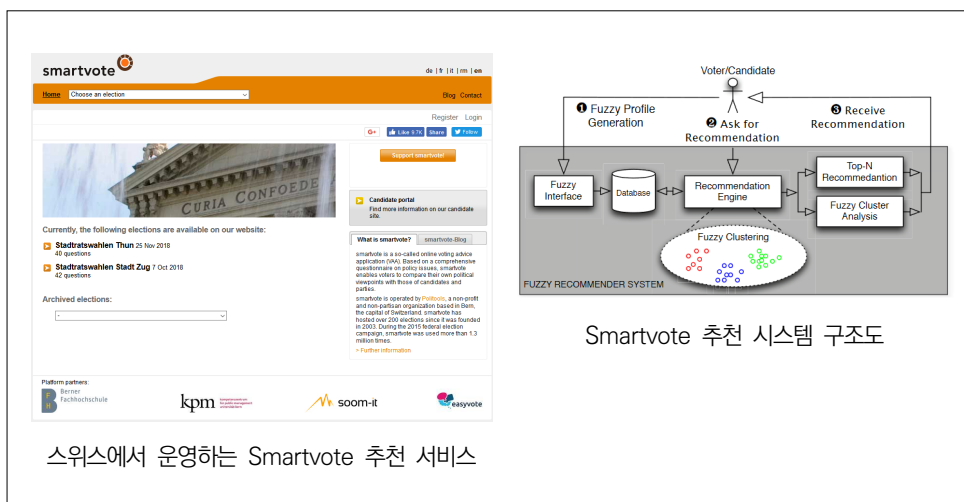
□ eDemocracy: 추천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인 사회 참여 기회 증강 (Terán et al., 2010)

○ 투표 및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임. 그러나 중앙/지방 정부/의회 등 수많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입후보자, 공약 및 제반 정보의 양이 매우 커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음

○ 사용자로부터 간단한 설문을 받아, 후보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관련 있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손쉽게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정부-개인 간 추천 시스템의 사례를 보임

○ 예산 수립, 공약 추천 등의 도메인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Cantador et al., 2018)

[그림 5-5] Smartvote 추천 시스템 (smartvote, 2018): 스위스 정부에서 사용중인 정부-개인 간 추천 시스템 사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투표/선거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선호할만한 정보를 제공함. 사용자의 선호/지지와 가장 유사한 순서로 후보자/공약을 순차적으로 추천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올바른 선거/투표를 가능하도록 함



3. 추천 시스템 분류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천 시스템은 일련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용자가 모든 아이템 중 선호할만한 특정 아이템들을 밝혀내거나, 모든 아이템 중 특정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밝혀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됨(Bigdeli et al., 2008)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 아이템의 선호도를 내포하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먼저 구성한 후,
 - 구축된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가 경험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 및 평가하고, 최종 추천 세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침(오진오, 유환조, 2014)
 - 최근 사용자 선호도 패턴이 관찰된 기록 및 잠재 요인으로도 영향을 받는 다는 것에 착안, 최소한의 인터랙션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Steck et al., 2015)
- 일반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함. 첫째, 자연어 기반으로 작성된 아이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사용자가 경험한 아이템 구매/평가 정보에 주목함
- 상기 두 종류의 데이터 중 기반이 되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콘텐츠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혹은 협업적 정보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천 서비스를 진행함(오진오, 유환조, 2014). 아래에서 각각 두 가지 접근에 대해 상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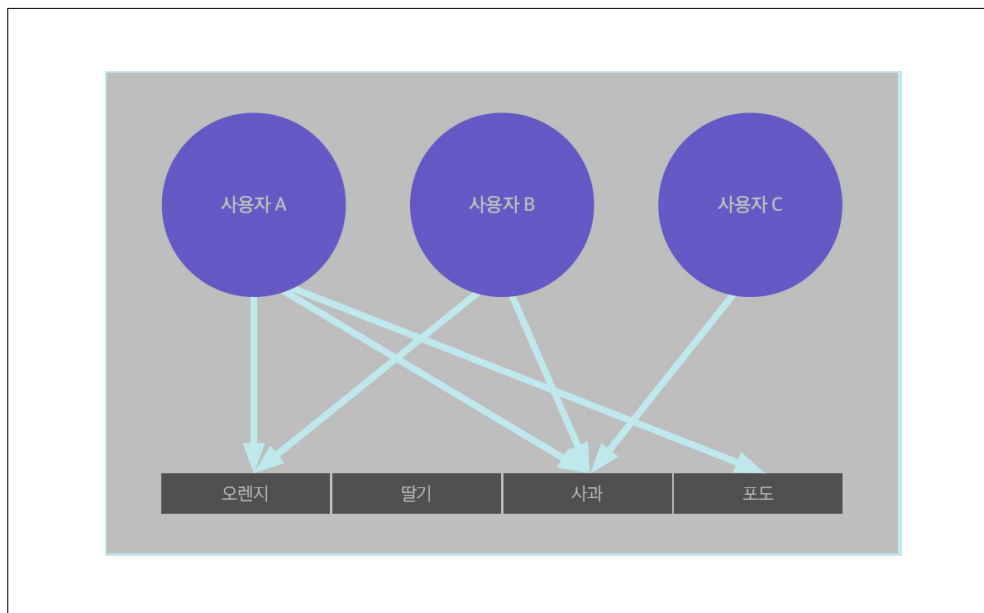
가.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 협업 필터링이란 대규모 사용자들의 행동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인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는 기술을 말함(Schafer et al., 2007).
 - 사용자의 행동 이력을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도출해내고, 사용

자간 유사성(user-to-user similarity)에 기반하여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임
(전병국, 안현철, 2015).

-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재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구매한 다른 상품들’ 혹은 ‘현재 음악을 청취한 사용자들이 청취한 다른 음악들’과 같은 서비스임

[그림 5-6] 협업 필터링 예시: 사용자 A는 온라인 과일 쇼핑몰에서 오렌지, 사과 포도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 사용자 B는 오렌지, 사과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 사용자 C가 사과를 구매했을 때, 온라인 쇼핑몰은 무엇을 추천해야 할까? 협업 필터링에 의하면 사용자 A, B 둘 다 사과와 오렌지를 함께 구매했으므로 사과를 구매한 사용자 C도 오렌지를 좋아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오렌지를 추천한다



자료: 서봉원, 2016

- 구체적으로(오진오, 유환조, 2014),
 - 협업 필터링에서 각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는 해당 사용자가 경험한 아이템 기록(예: 아이템 id, 아이템 평가/리뷰)을 이용한 벡터로 표현
 - 각 아이템 또한 아이템을 경험한 사용자 기록(예: 사용자 id, 사용자의 평가

/리뷰)의 벡터로 표현

- 상기 벡터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사용자 유사도(user-to-user similarity), 또는 아이템-아이템 유사도(item-to-item similarity)를 사용자 벡터 간 피어슨/코사인 유사도, 혹은 아이템 벡터 간 피어슨/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추천 후보군을 도출

○ 사용자-사용자 유사도를 이용하여 협업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 함

- 사용자의 평가 내역으로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얻고,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한 상품을 추천
- 사용자 수가 극도로 적은 초창기 등 데이터 수가 별로 없거나, 경험 이력이 없는 신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추천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임(콜드 스타트 문제, Cold start)

○ 아이템-아이템 유사도를 이용하여 협업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Item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 함

- 사용자가 경험하는 아이템간의 조회/구매 유사도를 기반으로 연관 아이템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함
- 아이템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신규 사용자들에게도 추천이 가능함

□ 협업 필터링은 결과가 직관적이며,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없음. 가령 오렌지와 생수가 식품에 속하는 지, 서로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관계를 가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없음. 다만 사용자들이 두 제품을 구매했었다는 기록만을 근거로 한 제품을 구매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함. 이에 따라 다양한 적용사례에서 적절한 정확도를 보장함

□ 앞서 밝힌 바, 협업 필터링은 기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자료는 사용자와의 직접 인터랙션을 통해 취득할 필요는 없음.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운데 로그와 같은 형태로 기록된 검색 이력, 아이템 확인 이력, 구매 이력 등과 같은 정보를 사용함. 최소한의 기본 정보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함

□ 그러나, 협업 필터링은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초창기 데이터 수가 극도로 적거나, 신규 사용자의 경우 추천의 정확도가 떨어짐(콜드 스타트¹⁹⁾ 문제)
-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추천에 필요한 계산량이 늘어남. 사용자 수가 커짐에 따라 추천을 위한 계산이 수일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심각한 시스템 부하 및 서비스 사용자 경험 저하를 불러일으킴

나.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 based filtering)

□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란 개별 아이템들이 지니고 있는 메타 정보를 분석하고, 같은 정보를 지닌 다른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는 기술을 말함(Pazzani, 1999)

- 아이템의 속성에 근거하여 유사 속성 아이템들을 추천. 협업 필터링이 사용자의 행동 이력을 이용하는 반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 자체를 분석하여 추천을 구현. 예를 들어 음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를 분석하여 유사한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
- 아이템의 내용을 분석해야 하므로 아이템 분석 및 유사도 측정이 핵심(서봉원, 2016)
 - 아이템의 상세 내용 또는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벡터로 표현
 - 사용자의 선호 아이템 및 그 속성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축
 - 구축된 사용자 프로파일과 새로운 아이템 속성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아이템을 추천
 - 아이템 분석의 경우 군집 분석, 인공 신경망, tf-idf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템 속성 및 특징을 추출

□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내용 자체를 분석하므로, 협업 필터링에서 발생하는 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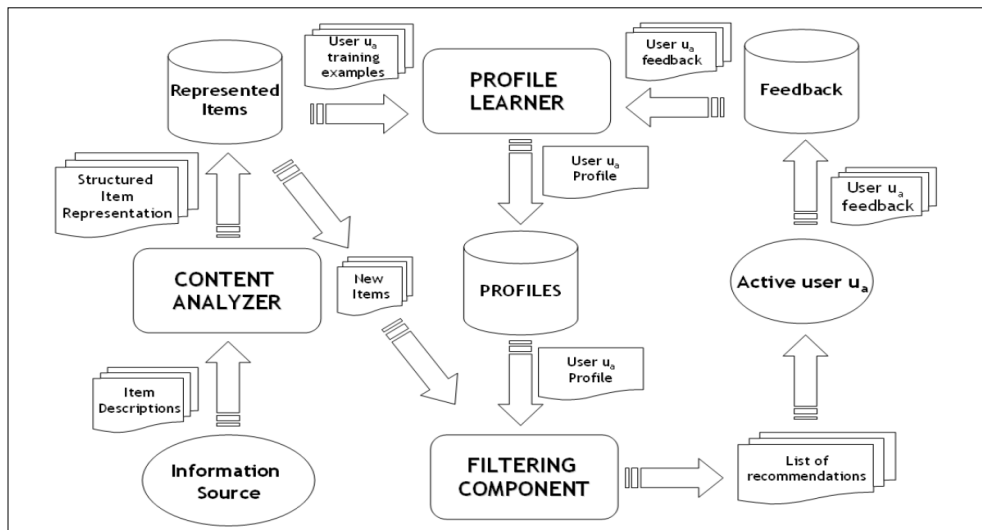
19) 콜드 스타트(Cold start): '새로 시작할 때의 곤란함'을 의미함. 초기 정보 부족 상태의 문제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됨.

스타트 문제를 쉽게 극복 가능. 또한 속성과 유사도는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빠른 추천이 가능해 짐

□ 다만, 다양한 형식의 아이템을 추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예를 들어 음악, 사진, 비디오, 관련 소설, 시 등을 동시에 추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각각의 아이템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아이템 속성 프로파일을 구축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천 시나리오가 적합해 보임

- 액션을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액션 영화 추천
- 보헤미안 랍소디 영화를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Queen 노래를 추천
- 피아노 곡을 즐겨 듣는 사용자에게 빌헬름 켐프의 연주를 추천
- 음식을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음식남녀 영화를 추천 등

[그림 5-7] 콘텐츠 기반 필터링 예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 자체를 분석하여 추천을 구현한다. 아이템의 속성을 계산하여 속성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실현한다. 예를 들어 정보가 수집되었을 때 content analyzer는 아이템의 속성을 추출하여 프로파일(profile)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아이템들을 찾아(filtering component) 사용자(active user)에게 제공(list of recommendations)한다.



자료: Lops et al., 2011

〈표 5-1〉 추천 시스템 장단점 요약

구분	협력 필터링	콘텐츠 기반 필터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으로 추천 성과가 좋음 • 잠재적인 특징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범위의 추천이 가능 •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확장성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사용 • 다른 사용자들의 이력이 필요하지 않음 - 콜드 스타트 문제에서 자유로움 • 새로 추가된 아이템들도 추천 가능 • 신규 사용자들에게도 추천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드 스타트 문제 - 아직 평가되지 않은 아이템들은 추천 대상으로 발견되기 어려움 • 신규 사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추천 서비스가 어려움 • 평가가 일관적이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추천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으로 표현된 특징들만을 처리할 수 있고, 내재적인 특징들은 고려될 수 없음 • 양적 부분에 비하여 질적 부분 포착이 어려움 • 사용자의 선호도/특징을 객관적인 표상/표현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움 • 추천 결과가 비슷한 장르에 고정되는 경우가 발생함

4. 추천 시스템 기술

가.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 메모리 기반 협업 필터링(Memory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 메모리 기반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보통 (i) 사용자들 또는 품목들 간의 유사성 가중치(similarity weights)를 계산하고, (ii) 유사한 사용자들에 대한 가중치 평균을 구함으로써 한 명의 사용자 및 한 품목에 대한 예측을 하는, 두 가지 단계를 따름
- 전통적으로 협업 필터링은 인접 기반(nearest-neighbor based) 협업 필터링, 그래프 기반 협업 필터링 및 행렬분해(Matrix factorization) 기법을 활용
- 사용자 간 유사도 계산은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 혹은 코사인 유사도를 주로 사용

[그림 5-8] 코사인 유사도

$$\text{simil}(x, y) = \cos(\vec{x}, \vec{y}) = \frac{\vec{x} \cdot \vec{y}}{\|\vec{x}\| \times \|\vec{y}\|} = \frac{\sum_{i \in I_{xy}} r_{x,i} r_{y,i}}{\sqrt{\sum_{i \in I_x} r_{x,i}^2} \sqrt{\sum_{i \in I_y} r_{y,i}^2}}$$

[그림 5-9] 피어슨 상관계수

$$S_{(x,y)} = \frac{\sum_i (r_{x,i} - \bar{r}_x) \cdot (r_{y,i} - \bar{r}_y)}{\sqrt{\sum_i (r_{x,i} - \bar{r}_x)^2} \cdot \sqrt{\sum_i (r_{y,i} - \bar{r}_y)^2}}$$

○ 예: k-Nearest Neighbor (kNN)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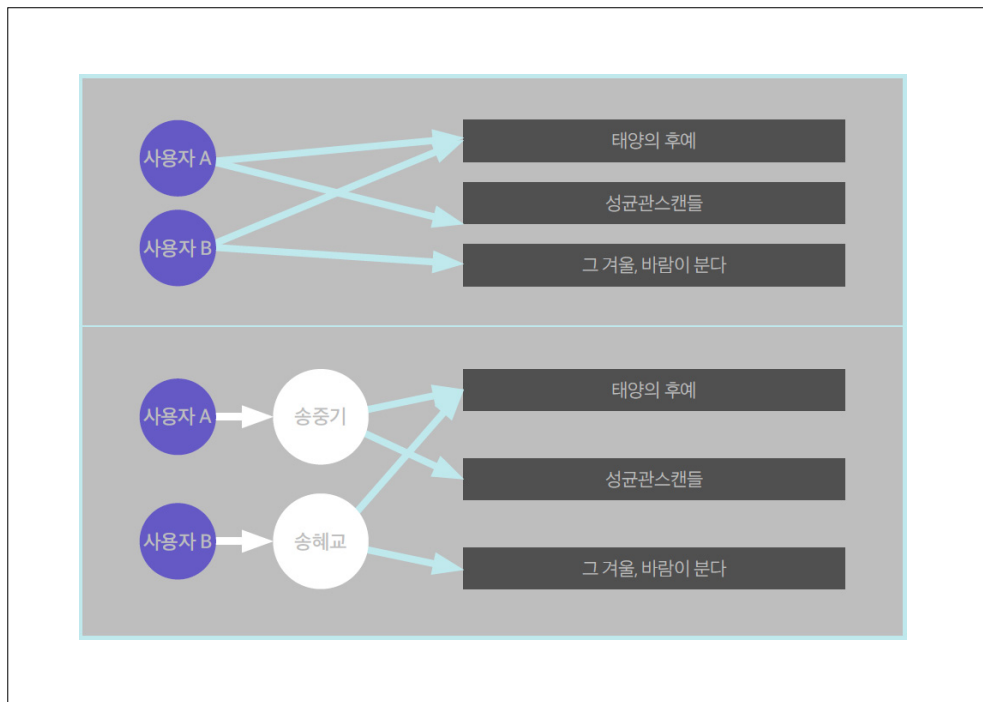
- 크게 사용자 중심(Good et al., 1999, Resnick et al., 1994), 아이템 중심(Sarwar et al., 1998, Sarwar et al., 2001)으로 나뉨
- 사용자 중심 kNN은 사용자-사용자 유사도를 근거로 특정 사용자(추천 대상)와 가장 비슷한 유사도를 가진 후보군 사용자들 k명을 선정. 후보군이 평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천 대상 사용자가 경험하지 않은 아이템의 선호도를 추정하는 방식
- 아이템 중심 kNN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중심 kNN과 동일한 개념으로 동작함. 단, 사용자-사용자 유사도 대신, 아이템-아이템 유사도를 근거로 추천을 진행하는 방식임

□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Model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아이템 선호도 벡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통해 생성한 후, 선호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해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임
- 베이저안 네트워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군집 분석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 등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생성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항목 간 유사성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 안에 내재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고려한 추천을 가능하게 함
-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산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모델이 구축되면 추천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추천의 정확도가 메모리 기반 협업 필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사용자들의 선호 이력이 자주 변경되어, 추가 학습을 통해 모델에 자주 반영해

아 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음

[그림 5-10]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의 잠재 모델 예시: (위)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만 이용하여 추천을 진행. 일반적인 메모리 기반 협업 필터링의 예시를 보여줌. (아래) 사용자-선호도 기반 정보로 생성한 모델은 잠재 노드를 사용함으로써, 더 풍부한 내재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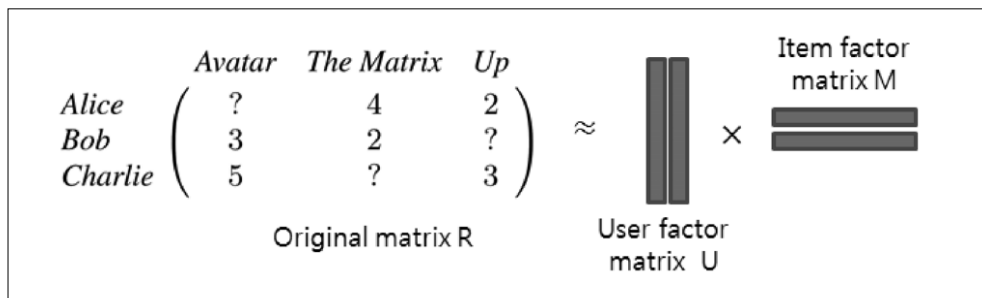
자료: 서봉원, 2016

○ 예: 행렬 분해 기법(Matrix Factorization)

- Netflix 추천 알고리즘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각광받은 기법.
- 사용자의 아이템 선호도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아이템 벡터를 생성하고, 당 벡터와 최대한 유사한 값을 가지는 요인 행렬을 도출. 그 후 도출된 요인 행렬을 이용하여 개별 사용자들의 개별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추정함
- 그림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본 벡터 R이 있다고 가정. R은 세 편의 영화들에 대한 세 명 사용자들의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음. 선호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로 남겨져 있음

- 여기서 목적은 $U \times M$ 행렬이 원본 R 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는 U 와 M 의 조합을 찾는 것임. 이것이 바로 위에서 정의한 요인 행렬을 말함
- U 와 M 의 조합을 찾으면, $U \times M$ 의 결과로 R 과 같은 차원의 행렬이 도출될 것임. 그럼 R 에서 ?로 되어 있는 곳의 선호도를 요인 행렬에서 확인이 가능함. 이 추정된 선호도를 이용하여 추천을 진행하는 것이 본 접근의 핵심임

[그림 5-11] 행렬 분해 기법 기반 협업 필터링 예시



자료: 오진오, 유환조, 2014

나. 콘텐츠 기반 필터링 알고리즘

-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콘텐츠의 형식으로부터 내포하고 있는 의미 혹은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하고 추천 아이템들을 제공하는 방법. 예를 들어 콘텐츠가 영화 리뷰라고 가정하면, 콘텐츠의 형식은 텍스트, 내포하고 있는 특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될 수 있음
- 이런 경우,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텍스트의 조합이 가리키는 영화 선호 정도를 추출하여(sentiment - positive or negative) 이와 유사한 선호 정도를 갖는 영화들을 추천할 수 있음
- 예: 단어 봉투 기법(a bag of words)
 - 해당 아이템(예: 영화 리뷰)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을 이용하여 단어들의 위치 정보와 관계없이 출현 빈도수만을 채택, 이 단어-빈도수 조합을 해당 아이템의 벡터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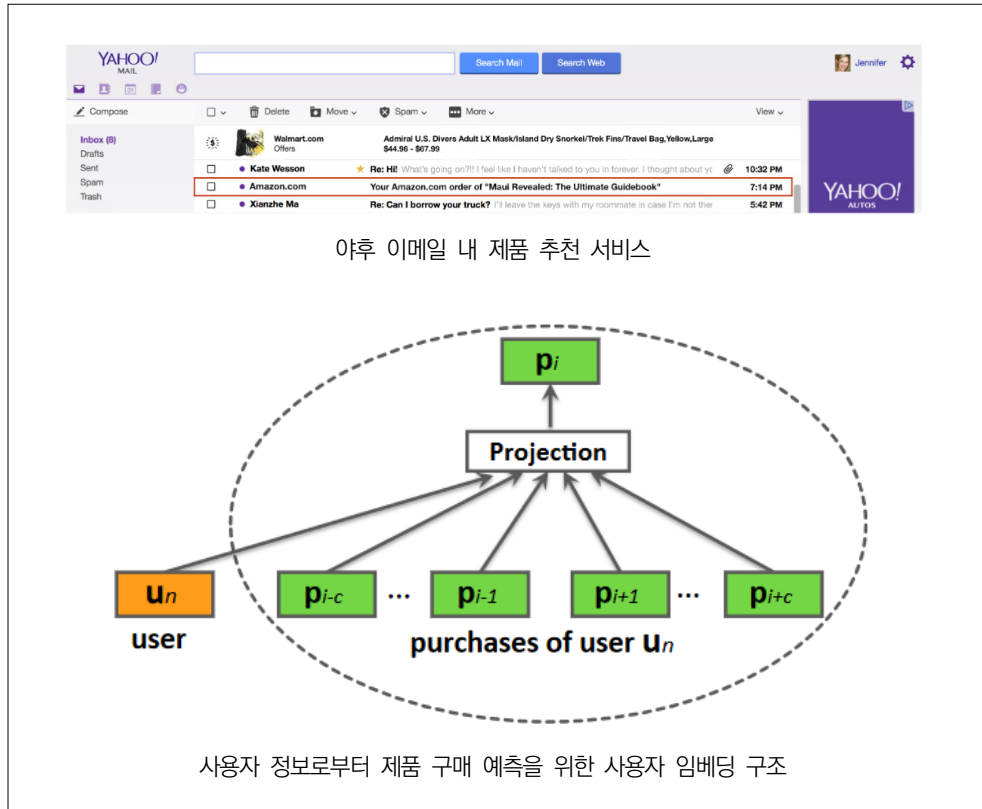
- 이렇게 구축된 벡터를 이용, 서로 다른 아이템 (예: 영화 리뷰들)의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구축된 벡터들의 조합으로 특정 사용자의 행동 프로파일을 유추해볼 수 있음

다. 딥러닝을 이용한 알고리즘

□ 임베딩을 이용한 접근(Vasile *et al.*, 2016)

- 임베딩(Embedding)은 하나의 아이템을 벡터로 표현하여 공간에 맵핑하는 기술로써, 자연어 처리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임. 예를 들어 word2vec (Mikolov *et al.*, 2013)은 텍스트 내 단어 간 확률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 단어 벡터를 만들고 이를 잠재 공간에 맵핑. 텍스트 내 모든 단어들이 맵핑된 모델을 이용, 단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있음.
- 이를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면, 사용자, 아이템 또는 컨텍스트들을 벡터로 정의하고, 이를 내재 공간에 맵핑하면, 공간상에서의 거리에 따라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천할 아이템들을 곧바로 계산해 낼 수도 있음 (Karatzoglou *et al.*, 2017).
- 예: Prod2vec(Grbovic *et al.*, 2015)
 - 사용자 정보와 물품 구매 이력을 입력으로 임베딩 모델을 구축. 이를 통해 향후 어떤 물품 구매를 고려하는 지 예측하여, 관련된 제품 광고를 효과적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
 - 모델 구축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연산량이 요구되지만, 높은 추천 정확도 성취 가능

[그림 5-12] prod2vec 추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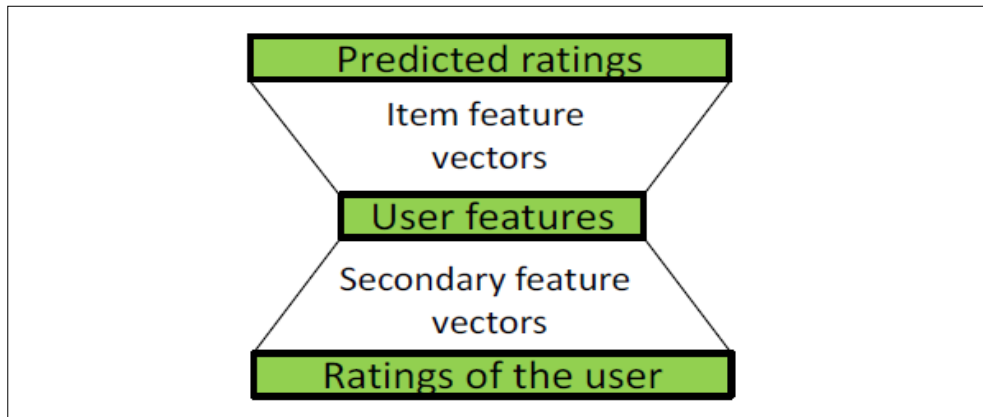


자료: Grbovic et al., 2015

□ 심층 협업 필터링 방법

- 불완전한 사용자-아이템 선호도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심층신경망을 훈련시켜, 특정 아이템에 대해 모든 사용자들이 어떤 선호도를 갖는지, 혹은 특정 사용자가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 집합을 갖는지 추론할 수 있는 협업 필터링 접근 방법임. 간단하게 말하면, 협업 필터링 방법을 심층 신경망으로 근사화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그림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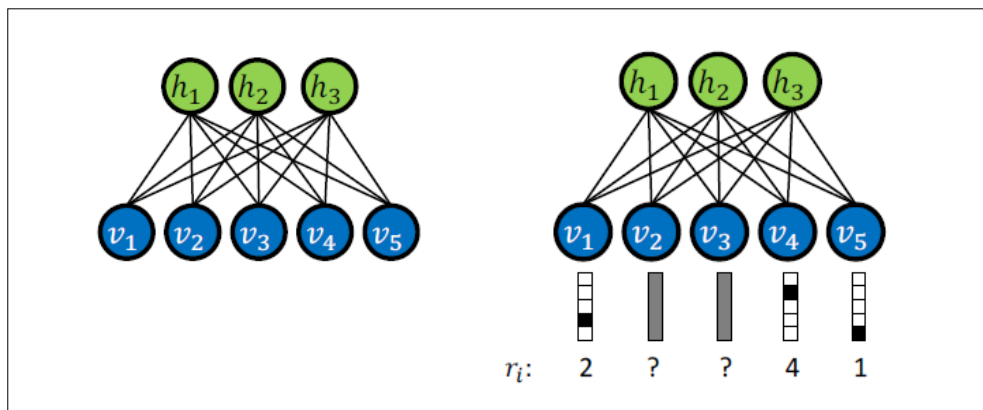
[그림 5-13] 심층 신경망 기반 협업 필터링 예시



자료: Paterek, 2007

- 뿐만 아니라, 오토 인코더, 볼츠만 머신등과 같은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불완전한 사용자-아이템 선호도 입력 데이터의 특징 분포를 학습한 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불완전한 입력값(여기서는 선호도)를 재구성해 내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음(Salakhutdinov et a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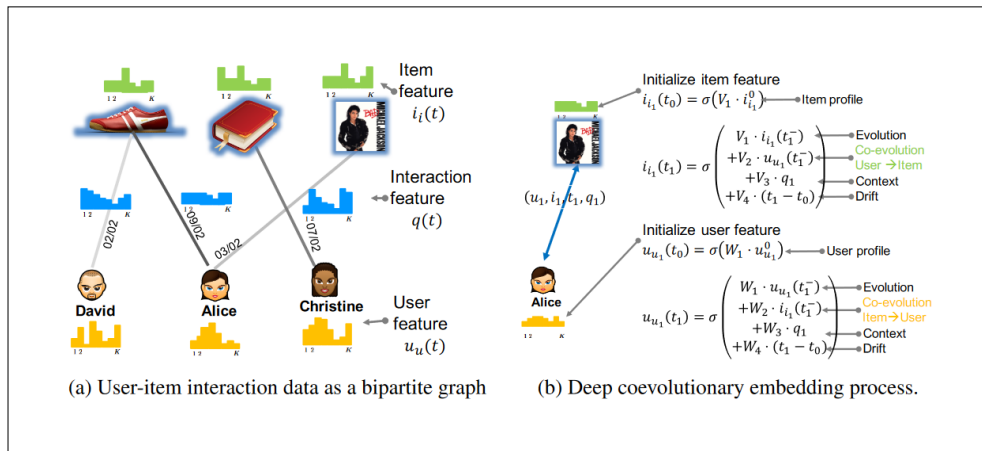
[그림 5-14] 심층 신경망 기반 생성 모델 협업 필터링 예시: (좌) 1단계 - 각 사용자 별 (불완전한) 사용자-아이템 선호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 볼츠만 머신을 학습 (우) 2단계 - 입력 데이터의 특징들의 분포를 배워, 스스로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생성. 이 과정에서 선호도가 주어지지 않았던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재구성해 낼 수 있음



자료: Salakhutdinov et al., 2007

-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과 협업 필터링을 결합하여, 여러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다거나, 서비스의 컨텍스트가 시시각각 바뀌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선호 변화를 고려하여 추천 아이টে을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도 등장(Dai et al., 2016)

[그림 5-15] 순환신경망 기반 협업 필터링 예시: (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아이템 선호도가 바뀌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는 사용자의 관심 변화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한 선호도 변화를 포함. (우) 제안한 시스템: 시간에 따른 아이টে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순환 신경망에서 근사화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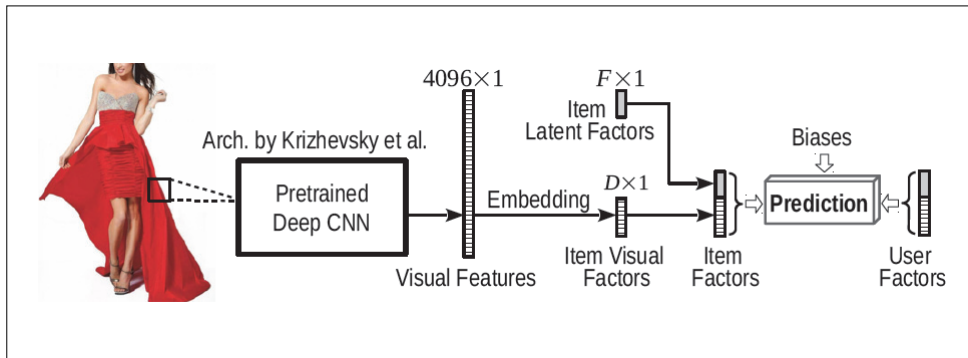


자료: Dai et al., 2016

□ 딥러닝을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방법

- 심층 신경망은 그 자체로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종류 혹은 도메인에 구애 받지 않고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CNN과 RNN을 적절히 조합하면, 영상/이미지, 소리/음성,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에서 바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그림 5-16] CNN 기반 하이브리드 협업 필터링 예시: 사용자-아이템 선호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의 시각 요소로부터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는 추천 시스템 개요. CNN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시각 요소 내재적 특징을 검출하고, 이를 사용자의 선호도와 근사화시킴



자료: He and McAuley, 2016

5.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천 시스템의 활용

-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추천 서비스는 더 정교해지고 고도화 되고 있음. 체계화된 고전적 방법론과 딥러닝이 조우하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온라인 서비스 방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스포티파이를 위시한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 상당 부분을 추천 시스템을 통해 얻고 있음.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정부와 개인을 담당하는 영역에서도 추천 시스템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초기 추천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용자 행동 이력에 의존하는 연구 동향을 보였음
- 그러나, 최근 딥러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크게 발달하면서 내재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추론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한 추천이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함

- 기존 추천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기록된 정량적 데이터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내재적 상황에 의해 시민이 복지 수혜 상황이 되었더라도,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최근 딥러닝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인터뷰/설문과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 대두되고 있고, 이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 모두를 융합하여 정교한 복지 수혜 탐지 및 추천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 또한 딥러닝의 우수한 근사화/모델링 성능은 정량적 데이터만으로도 내재적 요인을 충분히 (내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 6 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시스템 구축 방향

6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 운영 시스템 구축 방향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중장기 구축방안

- 여기서는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중장기적 체계구축방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복지로 등 기존 정보시스템이 구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찾아주기 기능의 중장기적 확대개선 방안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
 - 또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 의견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검토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방향
 -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넘어선 찾아주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 제고
 - 현행 복지로의 검색(Searching) 및 정보 제공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Curation : 다양한 정보를 수집·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는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개념보다 확장되어 사용
 - 국세청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확대 개편된 홈텍스 및 최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찾아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방향 설계
 - 가칭 “마이웰(My Welfare 또는 My Wellbeing 의미)” 시스템

- 복지 멤버십(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 등록) 및 App 기반 접근 활용

□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중장기 구축방향

○ (기본방향) 복지로 검색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와 유사한 포맷으로 “나의 소득재산 정보”, “나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내 정보 확인 및 신청과 급여기능, 추천시스템, 변경 알림을 포함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

- (개요) 개별 복지급여 신청, 탈락 이력과 부관하게 신청 또는 수급 중지 시에 찾아주는 서비스 희망 및 정보제공 동의의사 표시로써 다양한 복지급여를 생애주기에 맞추어 자동신청 및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 (법·제도) 복지급여 수급희망 의사에 따른 포괄적 동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이행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리대상 범위, 소득재산 변동 정보 업데이트 반영 등 실시주기, 관리방식 등 운영방안, 일선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사항 도출
- (기술적 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반영

□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복지정보 SOC 구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3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증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임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적극적으로

로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복지 멤버십 사전 등록제 도입을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인터넷, ARS,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제공, 최근 강조되는 커뮤니티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자원의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플랫폼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 추진, 복지사 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및 지역별 예측모형 구축과 위치 기반의 시각화 및 공간정보의 제공을 통한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정책 집행 관련 기준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선택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현해야 함

□ 정책목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중심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최근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현행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 및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시스템의 개념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 홈텍스 또는 최근 민간 서비스 시장 영역에서 다양하게 도입 확대되고 있는 찾아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구축방향을 설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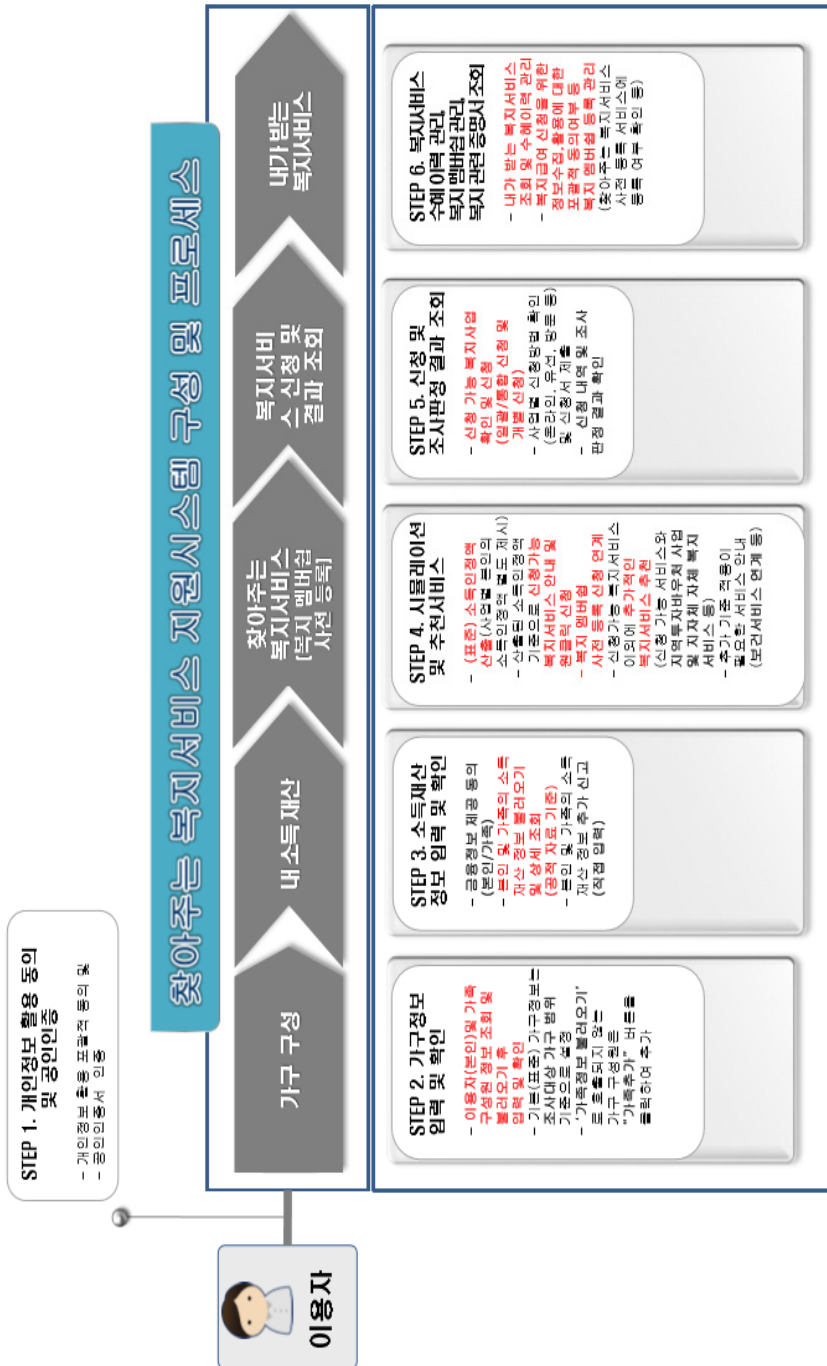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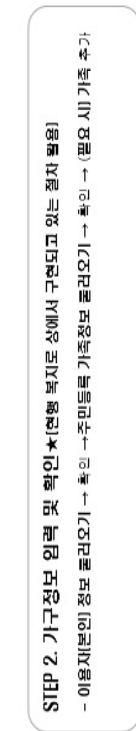
-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넘어선 찾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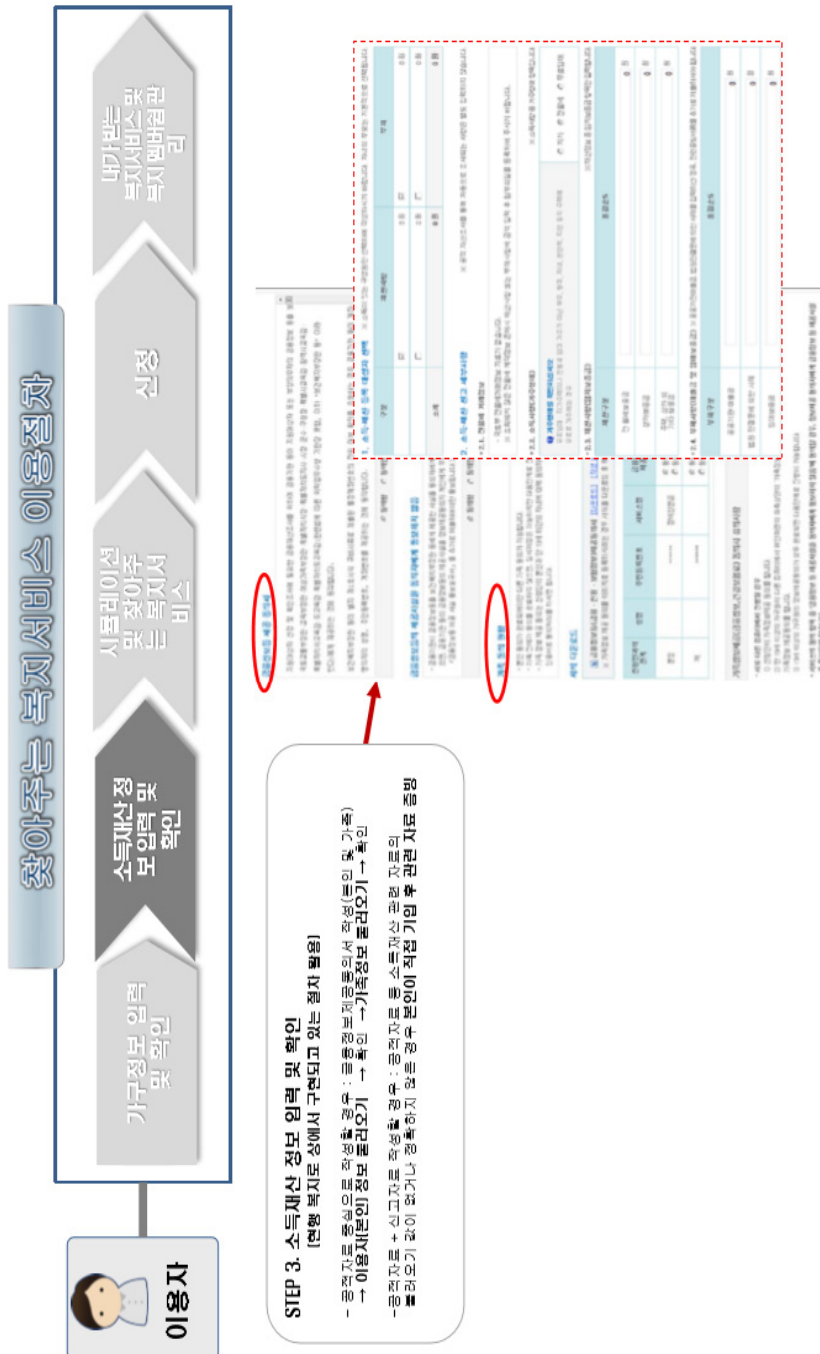
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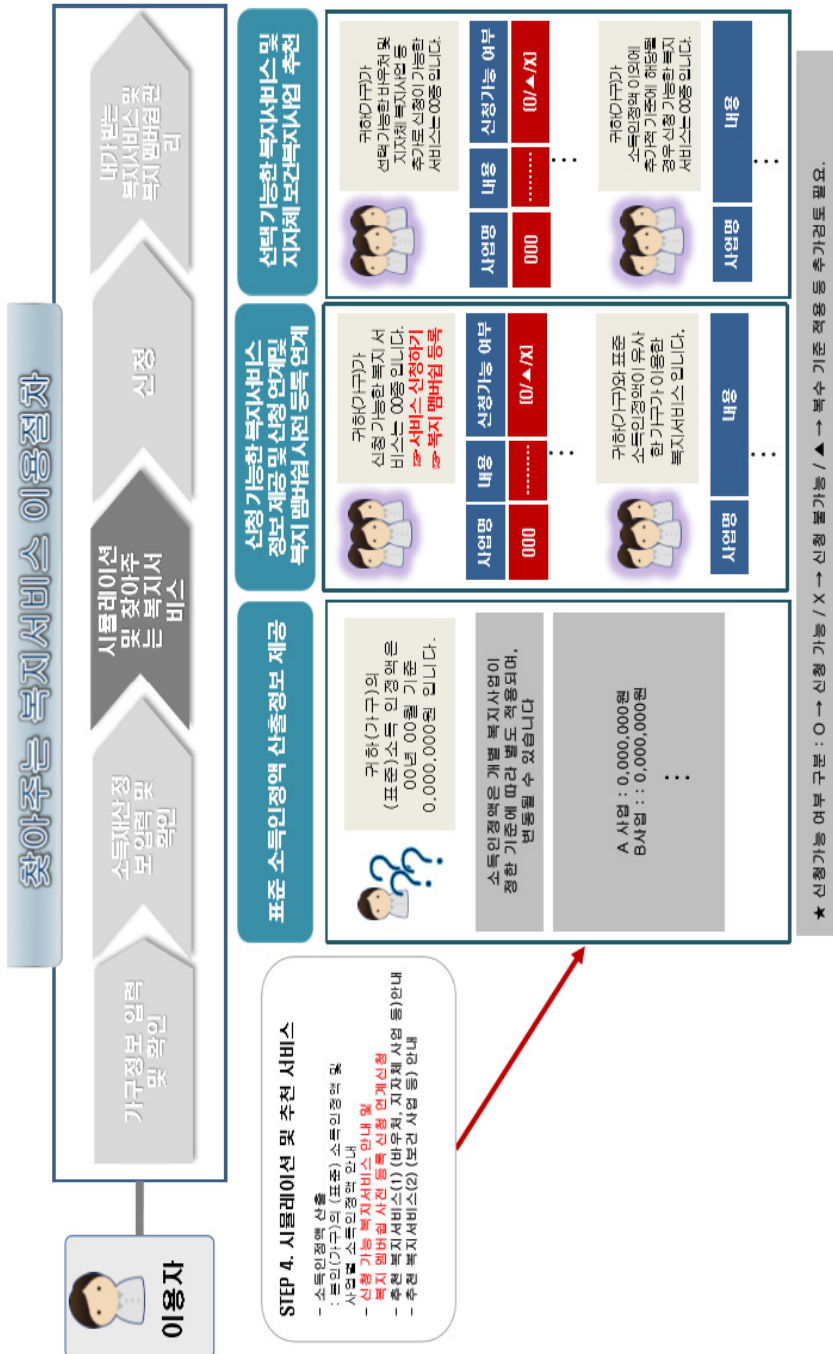
- 현행 복지로의 검색(Searching) 및 정보 제공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Curation: 다양한 정보를 수집·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는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개념보다 확장되어 사용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 분야 수요자 중심 정보시스템(가칭 ‘마이웰(My Welfare / My Wellbeing 의미)’은,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정책 및 서비스 관련 대표적인 정보 인프라로서 복지 멤버십(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 등록제)을 도입하여 쌍방향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App 기반 또는 ARS 등 생애주기 및 정보 접근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및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성 및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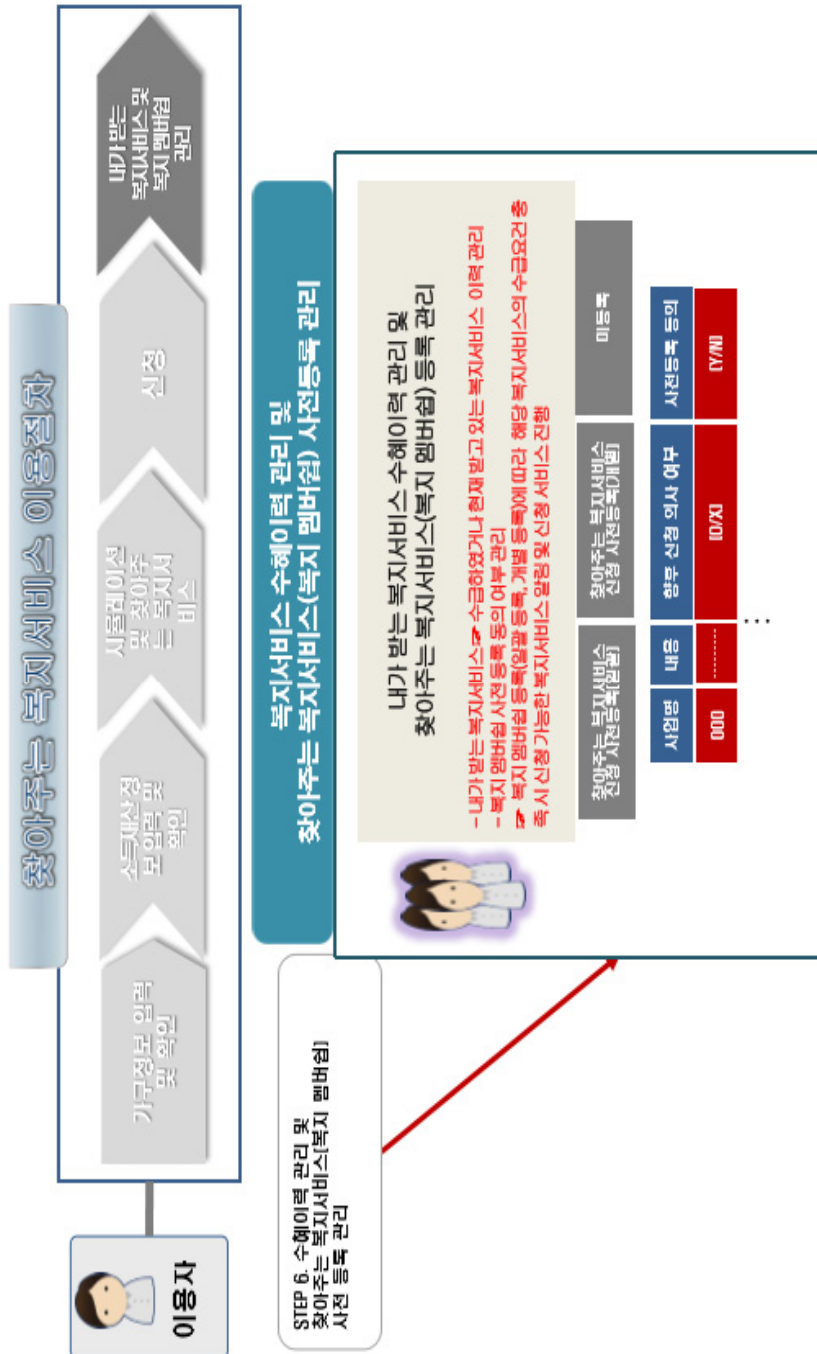


[illegible]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별 주요 내용

□ (Step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

○ 본인 인증의 다양화²⁰⁾

- (개요) 공인인증서 중심의 온라인/모바일 본인인증 체계에서 보다 다양한 인증수단 제공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황) 국민신문고 등 공공기관 모바일 앱의 비회원 로그인 인증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외국인 등록번호, 공공 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하고 있음

○ (표준화 방향) 본인확인 방법을 공인인증서 이외에, I-PIN,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표준화하고 장애인의 경우 ARS+인증팝업(청각장애인) 등 추가 수단 고려

-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중 청각장애인 전자금융거래 본인인증 방식 개선에서 청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ARS전화를 통한 인증과 동시에 PC에서 인증화면이 팝업 되어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도입(2015.11.03.)

□ (Step 2 & Step 3)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확인

○ 가구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의 연계 자동화

- (개요) 현행 복지로 통한 개인별 맞춤 복지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구 및 소득재산 정보 등 연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맞춤형 복지정보의 활용 편의성과 정확성 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황)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찾기 실행시 4대보험 여부만 확인

20) 표준화의 방법은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불확실한 기준과 내용에 대한 명확화 하는 방법 주요 내용이지만 단일한 기준 때문에 제도나 사업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이를 합리적인 유형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필요함

되고 소득/재산정보, 보유자동차, 주택, 부채정보 등 실질적 공적자료 연계가 미흡하여 본인의 입력 자료로만 복지서비스 확인가능

○ (표준화 방향) 정보연계 및 입력 절차

- ① 공적자료(가구정보 등 인적정보, 소득/재산 정보, 자동차 등) 자동연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 ② 본인입력 방식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입력하는 방식으로 표준화 추진
- (쟁점사항) 공적자료 연계 시 정확성과 연계시점에 대한 문제와 가족간의 금융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등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 (Step 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시뮬레이션 및 서비스 추천, 복지 멤버십 사전등록)

○ 범정부·지자체 복지사업 표준화

- (개요) 범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이용자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인과 실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복지사업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세부 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 방향) 현재 사업별로 제각각인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사업유형별 조사항목으로 표준화하고 비교가능하게 제시하는 표준화 방안 마련

○ 표준 소득인정액(가칭) 산출을 위한 가구 및 개인의 소득·재산 기본 항목 기준 표준화

- (개요) 이용자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판정 시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의 산출이 사업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 (표준화 방향) 모든 복지사업의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

로 판단됨. 따라서 이용자가 가진 특성(가구특성, 소득/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①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우선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② 사업별 특성 항목을 적용한 사업별 소득인정액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표준화

- 이를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표준화가 우선 필요하며, 소득, 재산의 측정을 위한 기본 항목, 각종 환산율과 공제 방식과 항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 필요
- (쟁점사항) 현재에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방식과 소득 및 재산 측정을 위한 항목들이 존재함. 따라서 이를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본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방식을 기본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논의와 결정 필요

○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 판정 방식과 판정 내용 알림 방식의 표준화

- (개요) 이용자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본인의 적격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판정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표준화 필요
- (표준화 방향)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판정 체계의 설계와 적용하고 안내할 내용에 대한 기준마련
- 자동판정 체계 : 표준소득인정액 산출 → 사업별 특성 반영한 사업별 소득인정액 산출 → 자격 유형 판정(기초 / 차상위 / 기타 등) → 이용자가 확인 요청한 사업들에 대한 적격여부 판정 → 판정된 자격요건으로 신청 가능한 타 사업(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사업 중)에 대한 추천
- 안내내용 :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전체 안내 vs 시뮬레이션 요청 시 확인 요청한 결과에 대해서만 안내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안내 될 수 있는 내용(안) : 표준소득인정액, 사업별 소득인정액, 자격유형 판정, 요청 사업들에 대한 적격여부, 서비스 신청, 기타 추천 서비스, 사전 서비스 신청 의사 확인 등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 신청(복지 멤버십)

- (개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용자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

해 주기적으로 안내를 받고 수급가능성에 들어올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선제적인 복지서비스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 방향)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 → 인적정보(가구정보), 소득 재산 정보를 통한 조사 및 적격여부 시뮬레이션 → 수급가능 여부에 따라 안내 및 자동신청
- 사전등록은 최초 본인 인증절차와는 별개로 추진. 단, 시뮬레이션 단계가 아닌 타 단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전등록 시 수급가능 여부 안내, 수급가능 여부 안내 + 이용자 직접 신청, 수급가능 여부 안내 + 자동 신청 등 이용자가 유형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
- (쟁점사항) 관련 제도(기존 수혜이력관리제도 등과 유사한 근거 법령 지침 필요), 최초 사전등록 이후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정

□ (Step 5)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회

○ 온라인 신청 체계에 대한 표준화

- (개요) 이용자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찾아주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현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에서 업무 담당자가 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하므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온라인 신청 사업에 대한 확대와 이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 (표준화 방향)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방식(일괄/통합 신청, 개별신청)과 방법(온라인, 우편, 유선, 방문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
- (쟁점사항)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의 확대,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신청 방식, 방법, 세부 절차(신청→접수)등)

□ (Step 6) 내가 받는 복지서비스 관리

○ 신청내역, 수혜이력, 시뮬레이션 판정 결과 등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

- (개요) 이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 개인화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세부 내용에 대한 표준화 필요
- (표준화 방향) 시스템 상에서 개인화된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 내가 받은 복지서비스 이력 등 복지서비스 수혜이력, 각종 증명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급결정 내용, 신청안내 등의 개인에게 제공할 서비스 항목 표준화
- 항목별 서비스 제공 내용 표준화

○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 항목 및 내용(안)

서비스명	주요 내용
복지설계 시뮬레이션	개인별 맞춤 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본인 및 가족의 생애 복지설계 기능 (공적자료 연계 또는 직접 기입)
서비스 보관함	서비스 즐겨찾기, 주민센터 방문이력, 온라인 신청 이력, 최근 조회 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맞춤형 서비스 조회/신청	개인별로 자격 및 신청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사업 목록과 신청 기능
온-오프라인 신청/결과 조회	개별 및 통합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태와 처리결과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 및 알림 기능
가족 맞춤형 서비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하여 알려주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 필요)
포털 사용 히스토리 관리	개인의 포털 사용 히스토리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 (수급자 탈락 이력 관리 통한 재신청 가능 여부 알림)
복지서비스 알림	연령별, 상황별, 욕구별 단계 도달 시 수급 예정 복지서비스 알림 기능 제공
이의신청	개인화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결과에 대한 소명 이외의 기본정보 수정 등 단순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능

참고문헌 <<

- 서봉원. (2016).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진화. 방송트렌드 & 인사이트, 5, 19-24.
- 오진오, 유환조. (2014). 추천 시스템. 정보과학회지, 53-58
- 이대영 외. (2012). 국가복지사업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III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원칙 및 방향 마련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이대영 외. (2015). 사회보장제도 공통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보장정보원.
- 이대영 외. (2017). 사회복지통합업무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사회보장정보원(미발간).
- 이효정, 김기범, 최연경. (2018).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AI 알고리즘의 활용,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84, 2-24.
- 전병국, 안현철. (2015). 사용자 리뷰 마이닝을 결합한 협업 필터링 시스템: 스마트 폰 앱 추천에의 응용, 지능정보연구, 21(2), 1-18.
- 추병주, 이인수. (2017). 사회보장급여 기준정보 통합관리 방안.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 함영진 외. (2018).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운영관리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VTW. (201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ISP.
- Bigdeli, E. and Bahmani, Z. (2008). Comparing accuracy of cosine-based similarity and correlation-based similarity algorithms in tourism recommender systems. 4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ICMIT 2008.
- Cantador, I., Cortés-Cediel, M. E., Fernández, M. and Alani, H. (2018). What's going on in my city?: recommender systems and electronic participatory budgeting. In Proceedings of the 12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pp. 219-223). ACM.
- Covington, P., Adams, J., & Sargin, E. (2016). Deep neural networks for youtube recommendations. In Proceedings of the 10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pp. 191-198). ACM.
- Dai, H., Wang, Y., Trivedi, R. and Song, L. (2016). Recurrent coevolutionary latent feature processes for continuous-time recommendation. In Proceedings of the 1st Workshop on Deep Learning for Recommender Systems (pp. 29-34). ACM.

- Good, N., Schafer, J. B., Konstan, J. A., Borchers, A., Sarwar, B., Herlocker, J. and Riedl, J. (1999). Combining collaborative filtering with personal agents for better recommendations. In AAAI/IAAI (pp. 439-446).
- Grbovic, M., Radosavljevic, V., Djuric, N., Bhamidipati, N., Savla, J., Bhagwan, V., & Sharp, D. (2015). E-commerce in your inbox: Product recommendations at scale. In Proceedings of the 21th AC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p. 1809-1818). ACM.
- He, R., and McAuley, J. (2016). VBPR: Visual Bayesian Personalized Ranking from Implicit Feedback. In AAAI (pp. 144-150).
- Karatzoglou, A. and Hidasi, B. (2017). Deep learning for recommender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Eleven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pp. 396-397).
- Lops, P., De Gemmis, M., and Semeraro, G. (2011). Content-based recommender systems: State of the art and trends. In Recommender systems handbook (pp. 73-105). Springer, Boston, MA.
- Lu, J., Shambour, Q., Xu, Y., Lin, Q., & Zhang, G. (2010). BizSeeker: a hybrid semantic recommendation system for personalized government-to-business e-services. Internet Research, 20(3), 342-365.
- Lu, J., Wu, D., Mao, M., Wang, W., Zhang, G. (2015) Recommender system application developments: A survey, Decision Support Systems, 74, pp 12-32
- Mikolov, T., Sutskever, I., Chen, K., Corrado, G. S. and Dean, J. (2013).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3111-3119).
- Park, S., Sung, I., Seo, S., Hwang, J., Noh, J. and Kim, D. (2017). News recommendation service using machine learning - focusing on Kakao's RUBICS -.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4(1), pp. 5-48.
- Paterek, A. (2007). Improving regulariz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for collaborative filtering. In Proceedings of KDD cup and workshop (Vol. 2007, pp. 5-8).
- Pazzani, M. J. (1999) A Framework for Collaborative, Content-Based and Demographic Fil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13: 394-408, 1999
- Resnick, P., Iacovou, N., Suchak, M., Bergstrom, P. and Riedl, J. (1994). GroupLens:

- an open architecture for collaborative filtering of netnews. In Proceedings of the 1994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175-186). ACM.
- Salakhutdinov, R., Mnih, A. and Hinton, G. (2007). Restricted Boltzmann machines for collaborative filtering. In Proceedings of th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p. 791-798). ACM.
- Sarwar, B. M., Konstan, J. A., Borchers, A., Herlocker, J., Miller, B. and Riedl, J. (1998). Using filtering agents to improve prediction quality in the grouplens research collaborative filtering system. In Proceedings of the 1998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 345-354). ACM.
- Sarwar, B., Karypis, G., Konstan, J. and Riedl, J. (2001). Item-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ation algorithms. In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pp. 285-295). ACM.
- Schafer, J. B., Frankowski, D., Herlocker, J. and Sen, S. (2007). Collaborative filtering recommender systems. In *The adaptive web* (pp. 291-324). Springer, Berlin, Heidelberg.
- Smartvote. (2018) <http://www.smartvote.ch> (Retrieved 20181115)
- Steck, H., van Zwol, R. and Johnson, C. (2015). Interactive recommender systems: Tutorial. In Proceedings of the 9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pp. 359-360). ACM.
- Terán, L. and Meier, A. (2010). A fuzzy recommender system for eElection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Government and the Information Systems Perspective* (pp. 62-76). Springer, Berlin, Heidelberg.
- Vasile, F., Smirnova, E. and Conneau, A. (2016). Meta-prod2vec: Product embeddings using side-information for recommendation. In Proceedings of the 10th ACM Conference on Recommender Systems (pp. 225-232). ACM.

〈부록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 실무자 대상 인식조사 실시방안 및 조사내용 구성안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제공 관련하여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요구사항 및 필수 고려 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 일반 국민, 복지서비스 희망자, 현장 업무 담당자(중앙/지방) 대상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성과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수요 및 의견 수렴 필요
- 이를 위하여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필요
 - 업무담당자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대상 및 방법 : 전국 맞춤형 복지팀 및 통합조사 팀 대상 설문조사(웹 설문조사)
 - 조사내용 : 현행 법령 및 제도 상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의 제약 사항 및 개선사항,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범위 및 구체적인 방안, 중장기적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변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용정보의 흐름 등 업무 관련 의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간 역할 정립 및 활용 방안 등
 - 사회복지전문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 FGI 및 자문회의 의견 수렴 병행

〈부표〉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내용

[0. 일반적 특성]

소속기관 및 지역
연령, 성별
직렬, 직급, 보직유무
복지업무 수행기간(개월)
현재 담당 업무(팀 / 업무 명) 및 수행 기간(개월)

[1. 찾아주는 복지패러다임 전환 및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인식]

찾아주는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간 역할분담 관련 의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및 시스템 구축방향 및 필수적인 반영사항에 대한 의견

[2.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 서비스 활용실태]

2-1 활용실태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이용 기간
본인 업무 중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활용하는 업무의 유형(상담, 조사, 신청, 지급, 사후관리)
담당 업무 수행시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활용 빈도(일 평균, 주 평균, 월 평균 / 시간)

2-2 현행 서비스 활용에 대한 평가

(전문성/ 책임성) 현행 서비스의 담당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보의 정확성) 현행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의 정확성은 높은 수준이다.
(효율성) 현행 서비스는 담당 업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응성) 현행 서비스를 활용한 업무 수행은 복지민원 대응에 효과적이다.

[3.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 개선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3-1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

(서비스 목적에 대한 이해도)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취지와 실시배경은?
(품질에 대한 인식) 현행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 내용과 이용 편리성(용이성),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은?(매우 부정~매우 긍정)
(문제점에 대한 인식) 현행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부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현행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는 개선이 필요한가?
(서비스 개선 영역과 내용에 대한 의견)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활성화(개인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내용은?
(to-be 모델에 대한 지향성)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 개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할 가치는?

3-2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

(현행 서비스의 장단점)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
(품질에 대한 인식) 현행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서비스 내용과 이용 편리성(용이성),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은?(매우 부정~매우 긍정)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현행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서비스는 개선이 필요한가?
 (to-be 모델에 대한 지향성)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 개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할 가치는?
 (서비스 개선 영역과 내용에 대한 의견)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활성화(개인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내용은?

3-3 수급희망이력관리제에 대한 인식

수급희망이력관리제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ex. 제도개선, 정보현행화, 공무원 권한 확대 등)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활용이 가능한 복지사업 유형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요소는?

3-4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에 대한 인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ex. 제도개선, 정보현행화, 공무원 권한 확대, 전담 조직 등 지원체계 운영 등)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 활용이 가능한 복지사업 유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로 개편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요소는?

1. 일반 특성

응답자 소속 및 조직			
1-1. 지역	1-1-1.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1-1-2.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① 대도시 ② 행정구가 있는 시(성남시, 고양시 등) ③ 일반시 ④ 농어촌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농어촌) 도의 '군'		
1-2. 소속 및 조직	1-1-2.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과 소속(부서/팀)을 선택해주세요.		
	소속기관	① 시·도청 ② 시·군·구청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소속부서(팀)	① 맞춤형 복지팀 ② 통합조사팀 ③ 복지사업팀(팀명 :) ④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3. 담당업무	1-1-3.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주업무)와 현재 담당업무를 수행하신 기간을 작성해주세요.		
	담당업무(주업무)	① 맞춤형복지업무 ② 통합조사관리업무 ③ 동(洞) 복지업무 ④ 동(洞) 기타업무 ⑤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현재담당업무 수행기간(개월) text 개월		
응답자 일반 정보			
1-4.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1-5.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1-6. 직위	① 팀장 ② 팀원	1-7. 직급	① 5급 ② 6급 ③ 7급 ④ 8급 ⑤ 9급
1-8. 직렬	① 사회복지 직렬 ② 행정 직렬 ③ 기타직렬		
1-9. 복지업무 총 경력(개월)			text 개월
1-10. 귀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 1-11로 이동) ② 아니오 (☞ 2-1로 이동)			
1-11. (1-10에서 '예'인 경우만 해당)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력(개월) * 복지업무를 담당한 총 경력 기간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한 총 기간 기재			text 개월

II.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 서비스 활용실태

2-1~2-4

귀하가 담당 업무 수행 중 복지로와 복지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요.

2-1

귀하는 담당업무 수행 중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2-2로 이동)

② 아니오 (☞ 3-1로 이동)

2-2

귀하가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총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복지업무를 담당한 총 경력 기간 동안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를 이용한 총기간을 기재

text

개월

2-3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의 활용은 주로 어떤 업무 수행 시 활용하십니까? 활용 빈도가 높은 업무 순서대로 배열해 주십시오.

① 상담 ② 신청·접수 ③ 조사 ④ 급여지급 ⑤ 사후관리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위의 업무들을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의 활용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해 주십시오.

활용빈도가 낮다 ← 보통 → 활용빈도가 높다

2-4

복지업무 수행시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의 실제 활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업무 유형	활용시간			
	1주월 평균(시간)		1개월 평균(시간)	
① 상담	text	시간	text	시간
② 신청·접수	text	시간	text	시간
③ 조사	text	시간	text	시간
④ 급여지급	text	시간	text	시간
⑤ 사후관리	text	시간	text	시간
⑥ 기타	text	시간	text	시간

2-5~2-8 다음은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2-5 현행 업무를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6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 정보의 정확성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는 현재 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 정보의 지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보통		→		매우 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8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를 현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복지민원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1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검색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복지민원 대응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보통		→		매우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 개선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3-1-3-5 다음은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선 필요성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요.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 품질 영역	품질(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품질이 높음
① 서비스 내용 이해의 용이성	10점 만점 기준 점
②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10점 만점 기준 점
③ 정보의 정확성	10점 만점 기준 점

3-2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3-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3-4로 이동)

3-3 복지로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중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와 개선 시 방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로 주요 서비스	개선 필요성			개선방향(항목개발 필요)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복지서비스 찾기(간략검색)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② 복지서비스 맞춤검색(상세검색)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③ 온라인 신청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④ 증명서 발급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⑥ 복지서비스 수혜이력 조회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⑦ 기타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 (필요내용)

3-4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할 때 복지업무를 담당자의 입장에서 향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용 편의성 ② 업무처리 효율적 지원 ③ 효과적인 민원대응
④ 제공 정보의 정확성 ⑤ 사후관리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5 현행 복지로 및 복지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개선 필요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다음의 개선 필요 영역별로 주요 개선 필요 내용들을 선택해 주세요.

개선 필요영역	개선 필요내용(보기 항목 개발 필요)
① 내용(컨텐츠)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필요내용 3) ④(필요내용 4) ⑤ (필요내용 5)
② 정보관리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필요내용 3) ④(필요내용 4) ⑤ (필요내용 5)
③ 정보활용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필요내용 3) ④(필요내용 4) ⑤ (필요내용 5)
④ 기타	① (필요내용 1) ② (필요내용 2) ③(필요내용 3) ④(필요내용 4) ⑤ (필요내용 5)

3-6~3-9 다음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대한 인식과 개선 필요성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3-6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일부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필요성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7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필요성과 타 복지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타 복지제도로 확대할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8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사업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온라인 신청 가능사업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유형과 내용이 동일한 사업
 ③ 동일 (중앙)부처 사업 ④ 지원대상이 보편적인 사업 ⑤ 1회성 사업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9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종의 사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수급희망이력관리제"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과 사유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사업명(시행부처)	선정사유
사업명 1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2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3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4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5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3-10-3-9 다음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3-10 귀하께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의 개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빈 칸에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는	① 누가? ()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누구에게? ()	
	③ 무엇을? ()	
	④ 어떻게? ()	

- 3-1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를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사항별로 개선 필요정도에 대해 0~10점까지의 점수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선 필요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		
① 업무 처리 절차 개선	0	1	2	3	4	5	6	7	8	9	10
②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 관련 제도의 수행 근거 마련(제도정비)	0	1	2	3	4	5	6	7	8	9	10
③ 공무원 권한확대	0	1	2	3	4	5	6	7	8	9	10
④ 정보시스템 개선(정보현행화 유지 및 관리, 정보보안 등)	0	1	2	3	4	5	6	7	8	9	10
⑤ 전담조직 등 지원체계 운영	0	1	2	3	4	5	6	7	8	9	10
⑥ 제도별 운영기준 표준화	0	1	2	3	4	5	6	7	8	9	10

- 3-12**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종의 사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과 사유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사업명(시행부처)	선정사유
사업명 1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2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3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4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사업명 5 (시행부처)	(각관식 사유 항목 개발 필요)

- 3-13**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칭)를 시행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text

★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법령 개정 검토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의의와 헌법적 가치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의미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란 복지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여기서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고,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함.
 - 행복의 바탕이 되는 “생활”이란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결국 “생계”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행복은 시작되고 그 행복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의의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궁극적으로 대한국민이 지향하는 바 중의 하나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는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혀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가 있다고 천명함

- 이러한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부합하게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책에 해당됨

2. 사회보장기본법 상 기본원칙의 구성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문제점과 개정안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내용과 문제점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조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정함으로써 “신청주의”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동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게 하여 국민의 권리적 복지로 작용하게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함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개정안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정안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내용과 문제점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책임”만 강조함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소홀해질 염려가 발생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개정안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며 특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동법 제1조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게 됨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지며 특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 문제점과 개정안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 내용과 문제점

-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 문제점
 -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제1항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과 의무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의 개정안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동법 제1조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과 의무를 강조할 수 있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개정안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 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 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가. 사회보장급여법의 의미와 개정의 방향

□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목적)의 내용

-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이라고 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방향

-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의 다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대두하게 됨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도 앞선 제1장 제2절에서

언급한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임

- 이렇게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법체계와 법논리에 맞는 것임

나.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의 개정방향

□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의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2조의 문제점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임
- 즉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 선별하는 것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시작임
- 그런데 제2조 제4호의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그 선별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없음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그 선별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제6호 “관리대상자”의 규정을 신설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6호에 “관리대상자”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

- 6. “관리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여러 목에 걸쳐 해당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
- 나. 보장기관장의 인지 또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 등에 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져 있다고 판단된 사람
- 다. 기타 추가사항 차후 검토 요망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관리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여러 목에 걸쳐 해당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사람
	나. 보장기관장의 인지 또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개정안
	<p>템에 의한 정보 등에 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져 있다고 판단된 사람</p> <p>다. 기타 추가사항 차후 검토 요망</p>

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의 내용

○ 제4조(기본원칙)

-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 문제점

-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6호에 “관리대상자”라는 정의 조항을 추가하는 관계로 제4조에 신설 조항이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에 새로운 ‘항’을 신설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제7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관리대상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실현을 위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실행한다.”를 신설함

○ 또한 차후 검토를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8항으로 추가함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개정안
<p>제4조(기본원칙)</p> <p>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원칙)</p> <p>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⑦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 기초하여 관리대상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실현을 위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실행한다.</p> <p>⑧ 추후 추가 검토</p>

라.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의 개정방향

□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제3절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로 변경하는 문제

○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은 총 4절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라는 제목 하에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되어 있음
- 제2절은 “지원대상자의 발굴”이라는 제목 하에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되어 있음
- 제3절은 “수급권자 등의 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되어 있음
- 제4절은 “사회보장급여의 관리”라는 제목 하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제3절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라는 제목 하에 제14조의2이하의 규정을 신설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 제4조에 “관리대상자”라는 조항과 관계된 추가 규정을 신설하는 만큼,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이라는 ‘절’의 다음 부분에 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를 두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함

○ 신설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규정 (예시)

- 제14조의2(보장기관의 책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리대상자를 적극적 관리를 통해 찾아주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대상자 등의 모든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3(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의 제공)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이 법 제11조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

인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이 확인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관리대상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은 추후 검토)
 - ④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의4(사회보장급여의 적극처분)
-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발굴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추후 검토
- 제14조의5(사회보장급여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 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에 탈락한 경우, 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에 유입되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은 관리대상자가 된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현행 공적 체계 내에서 주기적 자격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혜 자격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수

혜 자격관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제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자임이 확인된 사람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의한 개인정보관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추후 검토

- 14조의6 규정 검토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제3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 신설 조항

제14조의2(보장기관의 책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리대상자를 적극적 관리를 통해 찾아주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대상자 등의 모든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의 제공)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이 법 제11조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이 확인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관리대상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4(사회보장급여의 적극처분)

-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발굴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의5(사회보장급여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 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에 탈락한 경우, 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에 유입되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은 관리대상자가 된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현행 공적 체계 내에서 주기적 자격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혜 자격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수혜 자격관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제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자임이 확인된 사람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의한 개인정보관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제3절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법 체계의 개편 방향
- 현행 제2장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을 제2장 제4절로 변경하지만, 제15조부터 제18조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됨
- 현행 제2장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를 제2장 제5절로 변경하지만, 제19조부터 제22조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됨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의 구조	개정안
<p>제2장 사회보장급여</p> <p>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p> <p>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 민관협력</p> <p>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p> <p>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p>	<p>제2장 사회보장급여</p> <p>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p> <p>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 민관협력</p> <p>제3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제14조의2(보장기관의 책무) 제14조의3(사회보장급여 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의4(사회보장급여의 적극처분) 제14조의5(사회보장급여의 수급희망 이력관리)</p> <p>제4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p> <p>제5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p>

4. 개별 복지사업법의 준용방안

가.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의 의미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 신설의 배경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궁극적으로 대한국민이 지향하는 바 중의 하나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羈束)함
- 이러한 헌법적 기속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동법 제37조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을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강화함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중 제2조 제6호에 “관리대상자”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 제2조 제6호를 바탕으로 하여 동법 제4조 제7항과 제8항이 신설되고, 동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짐.
- 결국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의 규정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탄생하게 된 것임

나.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 준용

□ 개별 복지법에 준용의 필요성

- 대한민국 개별 복지법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약360여개에 달하고 있음
- 개인의 수치심과 정보노출에 대한 우려로 복지 서비스를 선뜻 신청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아동수당” 같은 제도의 경우 약3~4%의 누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국민이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신설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법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제고됨
- 이러한 의미에서 각 개별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혹은 보장기관은) ~~~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법조항을 두는 것이 법체계의 복잡화를 방지하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됨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을 준용하는 조항의 모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혹은 보장기관은) ~~~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개인정보보호법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조화

□ 검토의 대상이 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대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제공)

-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른 조항에서 “법률”이나 “법령”을 따르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등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률”이나 “법령”이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또한 이러한 정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찾아주는 복지서비스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신설된다면 “적법”성의 요건도 충족하게 됨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

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급여법에 신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법체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대신 “행정규칙”으로 총29건이 있음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들어가는 제도이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연관성을 위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와 관계된 규정을 신설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된 구체적인 규정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관련 행정규칙 총29건

훈령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926호, 2018. 9. 17., 일부개정]
 훈령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부훈령 제267호, 2018. 8. 21., 일부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2호, 2018. 6. 11., 전부개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산림청훈령 제1365호, 2018. 6. 1., 일부개정]
 예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소방청예규 제11호, 2018. 6. 1., 제정]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5호, 2018. 5. 24., 일부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60호, 2018. 4. 30., 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새만금개발청훈령 제95호, 2018. 4. 17., 일부개정]
 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418호, 2018. 3. 21., 일부개정]
 예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경찰청예규 제534호, 2018. 3. 19.,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무부훈령 제1135호, 2018. 1. 8., 일부개정]
 훈령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행정안전부훈령 제19호, 2017. 12. 12., 일부개정]
 훈령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9호, 2017. 9. 1., 제정]
 훈령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해양경찰청훈령 제7호, 2017. 9. 1., 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8호, 2017. 8. 29., 폐지제정]
 훈령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1467호, 2017. 8. 28., 일부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 2017. 8. 24.]
 예규 통계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통계청예규 제209호, 2017. 8. 1., 일부개정]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훈령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외교부훈령 제88호, 2017. 6. 25., 일부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53호, 2017. 4. 25.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812호, 2017. 2. 23., 전부개정]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훈령 제93호, 2016. 12. 14., 전부개정]
 훈령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특허청훈령 제861호, 2016. 12. 9., 일부개정]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용노동부훈령 제202호, 2016. 11. 2., 전부개정]
 훈령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통일부훈령 제525호, 2016. 3. 17., 제정]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186호]
 예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경찰청예규 제481호, 2013. 11. 6., 전부개정]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토지리정보원기타, 2012. 3. 23., 제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특히 제2호, 제3호, 제5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규정의 활용을 위해 추후 사회보장급여법에 신설 조항을 넣을지 고민해야 함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민감정보처리도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능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조항을 검토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에 대한 고민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의미와 “관련 법률”의 해석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부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및 현행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관련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법령

○ 사회보장급여법

<p>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p>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p>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p>	

<p>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p>	
---	---	--

○ 기초연금법

<p>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p>	<p>「기초연금법 시행령」</p> <p>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재산신고서 	<p>「기초연금법 시행규칙」</p> <p>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15. 12.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	--	--

<p>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p>	<p>2.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p> <p>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p> <p>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p>	<p>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p> <p>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 서식</p> <p>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p>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p>
--	---	---

<p>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신설 2015. 12. 4.></p>
	<p>「기초연금법 시행령」</p> <p>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p>	<p>「기초연금법 시행규칙」</p> <p>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4.></p> <p>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p> <p>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p> <p>3. 영 제13조제1항제4호</p>

	<p>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p>	<p>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 서식</p> <p>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p>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신설 2015.</p>
--	--	--

	<p>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 11. 30.]</p>	<p>12. 4. ></p> <p>「기초연금법 시행규칙」</p> <p>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p>「기초연금법 시행규칙」</p> <p>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5. 12. 4.]</p>
--	---	---

○ 장애인연금법

<p>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p> <p>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5.20.></p> <p>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p>	<p>「장애인연금법 시행령」</p> <p>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2.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p> <p>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p> <p>제13조(서식)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p>
--	--	--

<p>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p>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p>	<p>4.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가. 주민등록증</p> <p>나. 자동차운전면허증</p> <p>다. 장애인등록증</p> <p>라. 여권</p> <p>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p> <p>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p>	<p>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p> <p>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p>
--	---	--

<p>정보”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제9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한다)</p> <p>7.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p> <p>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 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p>	
--	---	--

	<p>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6.30.〉</p>	
	<p>「장애인연금법 시행령」</p> <p>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p> <p>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7.12.〉</p> <p>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p> <p>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p> <p>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p> <p>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p>	

	<p>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p> <p>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p> <p>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p> <p>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p> <p>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p> <p>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p> <p>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p>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p>	<p>「장애인연금법 시행령」</p> <p>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p>	

<p>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2.3.]</p>	<p>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p> <p>2.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p> <p>3.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7.12.]</p>	
<p>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p> <p>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2014.5.20.〉</p> <p>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p>	<p>「장애인연금법 시행령」</p> <p>제9조(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6.30.〉</p> <p>1. 심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등급이 정해진 사람.</p>	<p>「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p> <p>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p>

<p>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p> <p>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p>	<p>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2. 65세 이상인 사람</p> <p>3.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심사규정에 따른다.</p>	<p>「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p> <p>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p>
---	---	--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0.></p> <p>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p>		<p>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p>
--	--	---

<p>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p> <p>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5.20.></p> <p>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p> <p>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p>		<p>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p>
--	--	---

<p>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5.20.〉</p> <p>⑩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p> <p>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p>		

<p>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5.20.></p> <p>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p>	<p>「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수</p>	

<p>다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p>	<p>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p>	
---	---	--

<p>제9항을 준용한다.</p> <p>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2.8.]</p>	<p>[본조신설 2017.7.17.]</p>	<p>「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p> <p>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p> <p>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p> <p>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7.24.]</p>
--	--------------------------	---

〈부록 3〉 연도별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09~2015)

1.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09년)

조사항목			기 준	표준화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기초보장) 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자료 중 임의적용 (기초노령) 건보공단, 국세청, 국민연금 順 (보육)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順	① 건보공단 ② 국민연금 ③ 국세청 자료 順 적용
		일용근로자 소득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 국세청 일용직근로소득자료 - 과소 파악 자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가이드
	사업 소득	농업 어업 입업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 농지원부 등 조회 후 작물별 단가 적용하여 소득산정
		기타 사업소득 (자영업)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 국세청 소득 적용 - 과소 파악 자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가이드
	기타 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추정 (기초노령) 미반영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가이드
재산	일반 재산	토지	(기초보장) 시가산정(시군구별 환산율 반영) (기초노령) 공시가격 적용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사업별 보정률 적용 가능
		건축물	주택/건물 (기초보장) 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 공시가격 적용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사업별 보정률 적용 가능
		시설물	미반영(자료제공 없음)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기초보장) 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 공시가격 적용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적용
		어업권, 입목재산	미반영(자료제공 없음)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회원권	(기초보장) 공시가격 (기초노령) 미반영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분양권, 입주권	(기초보장) 시가원칙 (기초노령) 시가원칙	- 당첨(보유)여부 자료 확인 후 가액 산정 반영
		가축, 종묘	(기초보장) 현지실사로 금액결정 (기초노령) 미반영	- 신청인의 신고가액 적용
	금융재산		(기초보장) 계좌당 200만원 이상 조회 (기초노령) 계좌당 10만원 이상 조회	- 조회기준 통일 (계좌당 10만원 이상)
	승용차		(기초보장) 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 지방세정 자료로 역산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적용

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10년)

조사항목	기존	표준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평가방식	■ 사회서비스사업과 방식과 가족건강과 방식으로 이원화	■ 사회서비스사업과 방식으로 단일화
소득재산 기준소득	■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소득으로 단순화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평균소득 반영	■ 상시근로소득 - 연 평균소득 반영 - 실·휴직시는 감소한 소득 반영
처분 또는 매각된 재산의 처리방법	■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20% - 영유아보육: 최저생계비 120%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 16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20% - 그 외 사업: 최저생계비 120%
금융기관 외 대출금 인정범위	■ 기초생활보장: 개인간 사채 ■ 기초노령연금: 국가보훈처 대출 ■ 영유아보육: 회사대출금 포함 폭넓게 인정	■ 모든 사업: 공공기관 대출금 * 사채는 3년간 인정한다 축소 이후 폐지 * 단, 영유아보육은 현행 유지
급여계좌 예외 : 제3자 계좌	■ 복지수급계좌 지침('09.6월)과 기초생활보장 지침(시행령) 으로 이원화	■ 기초생활보장 지침으로 단일화
신분변동 처리방법	■ 기초생활보장: 교정시설 입소 다음달 중지, 퇴소일 재신청 ■ 기초노령연금: 형 확정 다음달 중지, 퇴소일 다음달 재신청	■ 금고이상 형 확정일 다음달 중지, 퇴소일 재신청 * 단, 기초생활보장은 교정시설 입소시 중지
급여지급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장애수당: 16일 이후 신청시 급여 50% 지급 ■ 그 외 사업: 신청일에 무관하게 전액 지급	■ 모든 사업: 신청일에 무관하게 전액 지급

3.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11년)

조사항목	기존	표준화
연령산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연도기준 :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지원 등 ■ 출생월기준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 출생월다음달기준 : 기초생활보장, 자활 ■ 출생월일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돌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복지사업에서 '출생월' 기준으로 만나이를 산정 * 다만, 현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은 출생월 기준보다 국민에게 신청기회가 넓으므로, 현행 기준을 계속 적용
보장가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사실혼), 30세미만 자녀 등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신청인 및 배우자 ■ 영유아보육: 부모 및 형제자매 ■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및 18세 미만 자녀 ■ 사회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건강관리 등: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혈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단위) 부부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가족관계등록부),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동일주소)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시 가구분리하고, 사실혼은 미인정 ■ 일부 사업은 사업 고유성, 대상자변동을 고려해 현행 기준 유지(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한부모가족지원 등)
건강보험료 확인사업의 소득인정액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을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돌봄 등 1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조사의 법적근거가 있는 7개 사업은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변경하되, - 지자체 사업팀 조사부담, 대상자 변동 등을 감안해,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복지정보과, ~'11.10월)를 활용하여 '12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후 '13년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변경 검토 * (7개 대상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아동가족지원,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포함)

4.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12년)

조사항목	기존	표준화
행복e음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평균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ex 바우처사업)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을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행복e음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7대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12. 4월은 건보료 인상으로 지원 대상 제외자의 민원이 과다한 시 기업을 감안해서 '13.2월부터 변경 적용
소득재산 등 변동자 급여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자 급여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인적정보 및 소득·재산정보의 기준시점이 전월과 당월로 사업별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급여 변동자의 경우도 타사업과 동일하게당월기준으로 급여 지급 하는 것으로 표준화 * 당초 민원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이었으나 각 사업과 간 자체 협의의를 통해 '13년 지침 개정이후 부터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비등기 법인의 자동차 처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10.6월, 국토부)에 따라 관공서 및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차량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차량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모든 단체 차량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 - 자동차등록증 확인을 통해 대표자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단체의 재산으로 처리
근로장려금 처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근로 장려금을 공적 자료로 제공되는 만큼 개인의 소득으로 포함 시킬 것인지, 저소득층의 근로를 고취시키려는 제도의 취지상 제외할 것인지 처리 지침 부재로 다수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대로 금융재산으로만 처리하고 소득에서는 제외
세종시 기본재산액 처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에 출범하는 세종시는 기초 지자체가 없는 도농복합(동, 읍, 면) 특별자치시로 기존 분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이 없기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도시로 처리하고, 유예를 두지 않고 바로 적용
세종시 토지가격적용 율 처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가격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 적용율을 통해 가격을 보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대상자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 - 공주시 편입 지역의 대상자수가 적고, 향후 토지가격 상승 예상 등을 감안해 연기·청원지역의 적용율(0.8)로 합의

5.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13년)

조사항목	기존	표준화
부동산 재산 처분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실매매가 등 사업별 평가기준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공시가격 적용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처분한 재산의 자연적 소비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소비금액에 대해 사업별로 인정기간과 금액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최저생계비의 120%를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기준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한 재산 가액 소진시까지 적용
자동차 재산 처리시 지분율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지분율에 대해 사업별로 상이하 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지분율 인정하지 않고 수급자가 자동차 전체에 대해 소유한 것으로 인정
수급자 전·출입시 행정처리 절차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서류 보관 관리 주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보장) 시군구 - (기초노령)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출입시 이송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 처리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 후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기한이 사업별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14일 내에 대상자 결정 처리하되 금융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30일 내에 대상자 결정처리
바우처 사업 확인조사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재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변동 주기에 따라 연2회 확인조사(변동관리) 실시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순으로 자료 적용
일용근로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에서의 일용근로자 범위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침,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 자료 제공 기준)

6.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14년)

조사항목	기준	표준화
일반재산 중 회원권의 범위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 반영	■ 관련 사업에 일반재산 항목으로 요트회원권 포함
건설기계 재산산정 기준	■ 건설기계 재산가액 평가 기준 규정 부재	■ 건설기계 항목 명시 및 가액 산정 방식 표준화
금융기관 외 대출금 범위 및 조사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 명시적 규정 부재	■ 금융기관 외 대출금 중 공공기관 대출금에 한국장학재단을 명시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정보를 연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소득 반영	■ 소득산정시 미반영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연금 정보 연계
기본재산액 인정기준	■ 사업별 금액이 상이 - 차상위 자활: 13,500 만원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10,800 만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을 차상위 사업의 수준으로 조정 - 13,500 만원으로 표준화
환수(징수) 관련	■ 징수와 환수로 사용	■ 환수로 표준화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세부 소득 산정 방안	■ 세부적인 소득산정 기준이 사업별로 상이	■ 매월 건보료가 변동 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보료를 평균하여 산정
자격 증명서 서식 통합	■ 법령, 지침상 증명서의 서식 명칭이 다양하고 복잡	■ 주요 복지사업의 증명서 서식을 하나의 형태로 표준화 ■ 별도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증명서 서식을 삭제 - 기존 증명서 제출시 감면

7.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세부내용(2015년)

조사항목	기준	표준화
상시 근로소득 공적자료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자료 순으로 자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보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순으로 자료 적용
바우처 사업 등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준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대로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자·배당 소득 적용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과 시스템간 이자 배당소득 반영의 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사업별로 이자 배당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반영 - 시스템: 일부 고액 이자 배당소득만 소득인정액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적용 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적용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류 보존기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서류(서면서류)의 보존기간 및 파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전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가구평균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간 가구원수별 전환 비율 차이로 인해 선정기준 전환 표준안 마련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표」를 마련하여 제공하되, 매칭 기준선에 대한 표준화 안을 제시 하지 않고, 사업과가 결정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차상위 사업대상 조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별 수급자간 조사 방식 일관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의료: 자격만 확인하여 급여 제공 - 주거, 교육: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교육 수급자에 대하여는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주거·교육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차상위 급여 제공 ■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역시 수급자의 가구원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차상위 급여 제공 또는 자격 부여